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2~20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2~20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2~2013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 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처 (주) 현대아트컴

가 격 7,000원

ISBN 978-89-8479-701-7 93340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2~2013



목 차

I. 동북아정세	1
1. 동북아 안보정세	3
2. 북핵문제	6
3. 한국의 대외관계	9
가. 한·미관계	9
나. 한·중관계	12
다. 한·일관계	16
라. 한·러관계	19
II. 북한정세	25
1. 대내정세	27
가. 정치동향	27
나. 경제동향	32
다. 사회동향	36
라. 군사동향	40
2. 대외관계	47
가. 북·미관계	47
나. 북·중관계	50

다. 북·일관계	53
라. 북·러관계	57
3. 대남동향	62

Ⅲ. 남북한관계 73

1. 남북대화	75
2. 남북교류협력	77
가. 경제분야	77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81
3.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86
가. 북한인권 문제	86
나. 대북지원	89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93
라. 이산가족문제	95

부록: 2012년 주요 사건일지	99
-------------------------	----

I

동북아정세 ...



1. 동북아 안보정세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중국의 부상은 2012년 동북아 안보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역내 질서의 재편으로 귀결되었다. 최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국내정치를 우선시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이를 중심으로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지역 안보질서에서 자신의 국가이익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과 관련된 중국의 대처, 센카쿠 열도 사건에서 보여준 중국의 강경 외교노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탈냉전 이후 미·중 관계는 경제적 그리고 군사·안보적으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유지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 미·중 간 경제적 상호존도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미국의 최대채권국이 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지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경쟁과 협력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만 무기수출로 인한 미·중 간 긴장고조, 서해상에서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경고,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미국의 대응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출범을 맞은 미국은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미·중 관계를 놓고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의 새 지도부와 새롭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중국은 거침없는 힘의 외교를 통해 사실상 강한 지역패권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현 지역

체제와 세력균형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중국에게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에 대해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장기적인 세력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 된다.

지역적 차원에서 현재 동북아 역학구조는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시적 일극체제를 거쳐 다시 양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냉전의 해체 이후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으로 동북아 세력균형은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로 안정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태평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존재하는 한 동북아 역학구조는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의 경쟁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중국의 전술과 외교정책은 동북아의 새로운 세력균형 내에서 자국의 역량을 시험하는 단계이므로 2012년의 영토분쟁들은 동북아의 변화하는 역학구조 하에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 견고히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이러한 양극체제는 최근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긴장고조의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강화된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유사시 미국이 센카쿠 열도에 일본을 도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은 2개 항모단과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핵잠수함을 동·남중국해로 파견, 필요시 개입 의지를 보여줬다.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분쟁 악화(Escalation)의 억제이며 특히,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함께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민족주의적(Irredentist) 행태를 봉쇄(Contain)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입지, 역사관, 민족주의적 우경화 경향을 고려할 때 동 문제의 지속 및 장기화

가능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냉전 중 유럽과 동북아에서의 양상이 보여주었듯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들은 중국으로의 편향 또는 접근이 불가피 하며, 또한 미국의 동맹체제 하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현상은 중국 공산당의 붕괴가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이후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세력균형 유지에 주력, 향후에도 일본과 함께 이러한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의회 연설에서 태평양 국가인 미국은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장기적 역할을 할 것(Pivot to Asia)임을 강조하였고, 2012년 4월 클린턴 미 국무장관 또한 미 해사 강연에서 21세기는 미국의 태평양 시대(America's Pacific Century)임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미국은 한국·일본·호주 등과 기존 안보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확대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여 등 다자적 협력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호주와 군사태세구상을 발표('11.11)하고 2012년 중반부터 미 해병대를 250명에서 시작해 수년 내 2,500명까지 증원, 호주 북부 다윈(Darwin)에 주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의 부상과 역내 영향력 확대라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전환 선언'은 미국이 유럽, 중동지역에서는 이미 관리 가능한 세력균형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 향후 사실상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장호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 북핵문제

북한은 2012년 초부터 김정일의 최고 업적 중 하나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한 정책노선을 채택하고 그의 유산인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김정일 사후 최초의 조평통 서기국 보도(1.15)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해나갈 것임을 공언했고, 노동신문 사설(4.9)에서도 강성대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핵을 강성대국의 핵심요소로 규정했다.金正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전략로켓트군’과 ‘원자탄’을 언급함으로써 핵능력을 무기화했음을 공식 선언(4.15)했고, 열흘 뒤에는 조선인민군 창건 80돌 중앙보고대회에서 리영호 총참모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김정일에 의한 역사의 기적이라고 연설(4.25)했다. 또한, 북한은 4월에 개정한 헌법 서문에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북경에서 가진 3차 회담(2.23~24) 결과를 평양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2.29)했다. ‘2·29 합의’로 명명된 이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와 핵실험 중단, ②우라늄농축 시설 포함 영변에서의 핵 활동 중단, ③영변에 대한 IAEA 사찰 수용, ④미국은 북한에 대해 24만 톤의 영양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29 합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는데 결국 동 합의는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의 제4차 장거리미사일 발사(4.13)를 둘러싼 논란으로 파국을 맞고 말았다. 첫째, 양측이 공동성명이 아니라 각자가 이해하는 합의내용을 각각 발표함으로써 해석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둘째, 장거리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발사

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중단”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면 언제라도 다시 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셋째, 핵 활동 중단 대상은 굳이 “영변”으로 국한함으로써, 제3의 장소에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우라늄농축시설, 핵실험 시설, 핵무기 배치기지, 핵무기 제조시설 등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핵실험 카드를 꺼낼 것이며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기술적으로 완료되었다는 평가가 그 배경이었다. 북한도 2·29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바꿔서 합의 파기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대응하여 성명을 발표(4.17)하면서 위성발사는 2·29 합의와 별개이므로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부자의 동상과 기념비를 파괴하려는 적대분자의 배후에 미국과 남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7.20)하고, “제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면서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7월 하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비공식 접촉에서도 북한은 2·29 합의에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며, 9·19 공동성명을 파기할지를 내부적으로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새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이어 12월 12일에도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두 차례의 핵실험('06.10.9, '09.5.26)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연속적으로 단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3년 상반기에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2006년 7월 일단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9일 첫 번째 실험을 실시했고,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가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5일 3차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후 5월 26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

핵실험의 경우 기술적인 준비상태는 모두 끝났으며 남은 것은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3차 핵실험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권력승계와 체제유지의 필수불가결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적 동기로서 두 차례의 핵실험은 부분성공에 그친 미완의 핵실험이었는데, 추가 핵실험을 통해서 무기체계 개발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로서 추가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 능력과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넷째, 3대 부자세습 정당화와 대내안정을 위한 유산 부풀리기로서 성공적인 3차 핵실험을 자력갱생과 주체의 과학기술 능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김정은의 치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권력승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넷째, 대미, 대남 협상용으로서 핵과 미사일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대미, 대남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후계구도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면서 동시에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체제유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새로운 생존전략을 2013년 초부터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성훈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 한국의 대외관계

가. 한·미관계

오바마 1기 행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 급변하는 동북아 역학구조 속에서 국제 현안들은 물론, 대북정책 공조를 통해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왔다. 실제로 지난 4년간 10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양국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은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왔다. 대북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2기 행정부와 2013년 새로이 출범할 박근혜 정부 간에도 이러한 긴밀한 정책 공조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2012년은 이명박 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한·미동맹을 복원 및 강화하고, 나아가 가치동맹으로까지 확대하는데 한·미 간 인식을 같이 한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군사적 측면에서 더욱 가시적이었는데 상호군수지원협정 표준시행약정 체결(1.30), 한·미 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 실행(2.27),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한반도 MD 통합운용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군사동맹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 양국은 2001년 이후 11년간 300km에 묶여 있던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하고 탄두중량을 현행 500kg으로 유지하는 새 한·미 미사일지침협상을 타결(10.17)했다. 새롭게 타결된 미사일 지침으로 완전히 독립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

려했을 때 이는 대단히 향상된 전략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우리의 탄도미사일로 북한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고려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들도 사정권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미 간 상호 경쟁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3.15)되면서 양국은 경제분야에 있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제·군사적 장치들은 새로이 출범한 양국 정부 간 진정한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12.12)함으로써 사실상 ICBM 확보를 통한 미 본토 타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UN안보리에서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천안함 폭침으로 사실상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회복은 더욱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차기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층 복잡해진 북한 문제를 숙제로 안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일본의 우경화, 동북아 군비경쟁의 부가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로의 회귀와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신정부와 전혀 다른 방향의 대북 강경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문제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 역시 통미봉남의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신정부는 향후 대북제재, 한·미 공조 및 북한과의 대화 등에서 당사국으로서 외교적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관계는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지역질서의 양극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지정학적·지경학적 조건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질서 유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할 것이나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국제질서의 안정적인 유지보다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독자적인 정책을 펴 나아가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문제 및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 남북한 및 주변국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본 축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들과의 독자적 협력외교를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의 외교기조는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의 협력, 나아가 국제적 규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2012년의 G20과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규범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제무대에서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내재화를 주도하는 규범국가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 김장호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나. 한·중관계

2012년의 한·중관계는 양국이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관계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모색한 해로 평가된다. 양국은 2012년을 한·중 우호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 간 대미, 대북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증진을 위해 정치·경제, 외교·안보 및 인문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활발히 모색했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우려한 한·중은 북경에서 정상회담(1.9~11)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을 합의하였음은 물론, 양국 관계의 증진과 지역 관심 사항에 대한 협력 및 한·중 FTA의 조기 추진 필요성에도 공감하였다. 이어 한·중 양국은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한(3.1~2)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고위 인사교류 확대,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관련 긴밀한 소통·협약 강화 등에 합의하고, 민간, 언론 등 각 분야의 세부적인 우호·교류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도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왕즈전 중국 정협 부주석(5.23~25), 왕치산 중국부총리(6.27~29), 명젠주 공안부장(7.12~14), 천즈리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9.2~5)의 방한이 잇따랐고 장즈쑤 외교부 상무부장과 안호영 제1차관이 참석한 5차 고위급 전략대화도 북경에서 개최(11.26)되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은 외교적 협력을 활발히 모색하였다. 즉,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한·중 정상회담(3.26)과 북경

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한·중 정상회담(5.13~14)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핵 및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공동대응을 협의하였다. 이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4.7), 아세안지역안보포럼(7.12), 유엔총회(9.24) 등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개최를 통해 지역협력 및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실제로 11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동향이 포착된 직후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간 회동(11.29)도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협력기조는 군사 분야의 교류협력에서도 이어졌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과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마샤오텐이 참석한 제2차 국방전략대화(7.31)에서 양국은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한 핫라인 설치, 군 유학생 교류 추진, 재난 구조 상호 지원을 위한 MOU 체결 가속화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군사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의 초기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중관계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분야의 교류협력도 지속되었다. 국제경제위기의 여파로 2012년 10월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365억 달러, 수입액은 736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제1위 무역상대국, 한국은 중국의 제3위 무역상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전체 무역수지를 상회하는 등 양국 간 경제적 협력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게다가 국제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 투자(54.5억 달러)와 중국의 대한 투자(4.4억 달러)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한·중 간 경제교류협력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FTA 협상이 시도되었다. 북경에서 개최된 1차 협상(5.14)에서는 협상개시

를 위한 행정사항이 논의되었고 제주에서 개최된 2차 협상(7.3)에서는 민감 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중 간 관계증진을 위한 활발한 협력 모색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와 대미관계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노정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사안도 확인하였다. 즉, 김영환씨 고문사건으로 촉발된 탈북자 복송 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이견과 갈등,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시각차,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800km 연장 발표(10.7)에 대한 중국의 우려, 만리장성의 연장을 둘러싼 양국 간 역사인식 차이의 표출, 한국 해경에 의한 중국 선원 사망 사건(10.16)과 이어도 문제를 포괄하는 해양경계선획정(EEZ) 문제 등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사안들은 2012년 한·중 간 실질적 협력의 가속화를 저해하였고 향후에도 한·중관계의 진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13년 한·중관계는 긴밀한 경제협력에 따른 외교안보적 협력수준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에도 중국은 자국의 안정적 부상을 위해서나 대미·대일 경쟁 및 견제관계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며 한국 역시 북한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중 외교안보적 협력은 지금보다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11월 18차 당 대회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안정적 부상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의 산적한 문제 해소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우호적 외부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0년 이후 중국의 ‘거친 힘의 외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변국에 확산되고 있는 점도 평화와 발전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중국의 협력적 외교 전개

의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예상은 18차 당 대회 직후 중국 측 우호대표단의 방한(11.2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긴요한 바, 한·중 FTA의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일본의 보수우경화에 따른 역사, 영토문제를 둘러싼 중·일, 한·일 갈등이 재연될 경우 한·중관계는 상대적으로 협력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2013년에 출범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의 완화 및 개선을 시도할 경우 북한체제의 안정을 일관되게 지향하고 있는 중국과도 북한 문제를 둘러싼 협력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중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협력을 활발히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중 간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북한문제와 한·미동맹 등 안보분야에 대한 신뢰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되거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 한·중은 외교안보적 협력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상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6자회담을 공전시키거나 핵 실험과 같은 도발적 행위를 통한 ‘판 흔들기’ 전략을 구사할 경우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 협력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한·중 간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로 한국은 중국을 고려한 양자 간 안보협력과 다자간 안보협력의 비중을 조정하며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 전병곤 통일학술정보센터 선임연구원

다. 한·일관계

한·일관계는 2011년 8월의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 파동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12월로 접어들어 위안부 문제와 그에 따른 한·일정상회담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점차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불편한 한·일관계는 2012년에도 계속되었다. 즉, 2012년의 한·일관계는 일본 우익들의 ‘위안부 평화비의 소녀상’에 대한 저급한 행위로 인해 다소 불편한 관계였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8.10)과 8.15 경축사에서의 ‘일왕 사죄’ 발언, 그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거친 반발로 인해 양국관계는 일시에 급랭하며 악화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노다 내각이 침몰하고 ‘조기 총선’의 권력게임이 전개되는 한편,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내정치에 이용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일본 민주당에서 2009년 정권의 출범이후에 처음으로 일부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고,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하는 서한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달(8.17)하였으며, 나아가 일본 외무성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구술서(외교서한)를 공식적으로 전달(8.21)하였다. 또한,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관련 발언을 비판하였고(8.23) 특별기자회견에서는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8.24)하였다.

일본 의회 차원에서도 한국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

에 항의하는 결의안이 채택(8.24)되었고, 이어 참의원에서도 결의안이 채택(8.29)되었다. 게다가 노다 총리, 아베 신조 전 총리,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 등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93.8)를 부정하는 발언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8.23)하였고, 다음날에는 노다 총리의 특별기자회견 내용을 즉각 반박하였다. 나아가 겐바 외무상의 독도 관련 발언에 항의하는 외교문서를 발송하였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전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한·일 양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8.31)을 통하여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치권과 정치인들에게 고노 담화를 수용하고 계승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총리가 아무리 사죄해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마침내 한·일 양국도 외교채널을 통해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를 진정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 주일대사와 일본 외무성 차관, 주한대사와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이 만나 현안을 협의(8.31)하였고 이어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APEC 공식 만찬장에서 회동(9.7)하여 ‘조기 진정’을 위해 상호 냉정히 대응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으며 APEC 정상회의 직후 한·일 정상이 만나(9.9)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양국이 협력할 것”에 의견을 같이하기도 하였다. 즉,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는 블라디보

스토크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느 정도 갈등의 봉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강경 여론을 조성하는 우익 세력의 시위, 일본의 반성과 자성을 촉구하는 지식인들의 호소문 등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예컨대, 일본 극우 네티즌 200여 명이 도쿄, 오사카 등에서 극단적인 혐한 시위(9.23)를 벌인데 반해, 오에 겐자부로(1994년 노벨문학상 수상) 등 일본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는 도쿄의 참의원 회관에서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일본의 탐욕’에서 비롯됐다고 하며 일본의 자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9.29)하였다.

일본 지식인 1,300명이 서명한 호소문은 독도문제와 관련, “일본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편입은 러·일전쟁중인 1905년 2월 한국이 이미 (일본에 의해) 외교권을 빼앗겨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한국 국민에게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기점이며 상징이라는 사실을 일본인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호소문은 “권력자들이 국내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영토문제를 이용한다”고 지적하면서 “두 가지(독도와 센카쿠열도) 문제는 영토를 둘러싼 갈등처럼 보이지만, 모두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라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은 스스로 역사를 인식하고 반성하며, 그것을 성실하게 대내외에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지식인들의 양심의 자성 촉구가 일본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한·일관계에는 과거사, 영유권 등의 갈등 요인들이 봉합되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갈등 요인들이 수면 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의원 총선(12.16)을 앞두고, 아베 신조의 자민당은 ‘정권공약’을

통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반론과 반증,’ 현행 시마네현 차원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의 ‘정부 행사’ 승격, 영토문제 조사연구 기관의 신설, 자학사관의 편향 교육 시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검정 기준의 변화 및 주변국 배려의 ‘근린제국 조항’ 수정 등을 제시하였는데 총선에서 압승, 강경 보수 성향의 아베 정권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 정국과 자민당의 우경화 성향을 볼 때 한·일관계의 장래는 밝지 않다. 아베 총리가 누카가 전 재무상을 특사로 파견(‘13.1.4)하여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극우세력들에 의해 과거사, 영유권 등 갈등 요인들이 한국을 자극할 경우 한·일관계는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반면, 한·미·일 3국 공조관계의 차원에서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추구해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진전을 갈망하는 양국의 지식인과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 배정호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라. 한·러관계

양국은 푸틴 대통령 집권 3기를 맞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경제면에서는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5명이 출마한 러시아 대선(3.4)에서 푸틴 총리가 63.6%를 득표하여 세 번째 집권(5.7)에 성공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3.13)를 갖고 당선을 축하하였다. 이 대통령은 “푸틴 당선인이 그동안 한·러 관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양국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틴 당선인은 축하에 사의를 표명한 후 “양국 관계가 잘 되고 있는데 특히, 경제 분야에서 무역뿐만 아니라 에너지, 조선, IT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남·북·러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3.26~27)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20차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9.8)을 가졌다.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외교차관 전략대화(4.27)와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정책기획협의회(7.19)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양국 간 경제협력과 고위인사 교류 확대, 북한 문제 등을 긴밀히 논의하였다. 한국 대선과 관련 푸틴 대통령은 한·러 관계의 성공적 발전을 언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확대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12.19).

안보·군사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간 제1차 국방전략대화가 러시아에서 개최(3.15)되었다. 양측은 한반도 주변의 지역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국방교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전략대화 정례화 방안·러시아 사관생도의 한국 위탁교육과 장교 방한 교육 등 군 인사

교류 활성화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3.26)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는 양측 간 공감대를 재확인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3호 위성 추진체’를 ‘미사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미사일 발사 계획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 평화에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4.13)에 대해 러시아는 이를 한·미·일·중 등 국제사회와 함께 비난하고 실패 이유를 미사일 1단계에서의 추진체 계 또는 유도체계에서의 문제로 분석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한 제3차 『고위급 안보 회의』(6.7~8)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송봉헌 국제안보대사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는 미·중·일 등 50여 개국 및 유엔의 외교·안보 담당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해적퇴치, 국제정보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 러시아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로그비노프 북핵담당 대사가 서울을 방문(6.25~27)하여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과 한·러 6자회담 차석대표 간 협의를 갖고 북핵, 북한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제5차 한·러 대테러협의회(11.16)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테러 정세를 평가하고, 테러리즘 일반, 극단주의 및 자생적 테러,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세탁, 마약밀매, 인신매매, 초국가 조직범죄 등에 대한 양자와 다자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경계면에서 일·러 간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관할하는 사할린주의 호로샤빈 지사는 4개 섬 가운데 에도로후와 구나시리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이 인프라 정비와 농업생산에 참여한

다고 밝혔다(5.12). 한국기업이 참여한 해안 벽 건설공사의 사업 규모는 약 14억 루블(약 530억 원) 정도이고 한국기업 근로자 50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겐바 일본 외무상은 이와 관련 “마치 러시아의 관할권을 전제로 한 것 같은 행위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러시아 측에 항의했으며, 한국 정부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5.30). 7월에는 양국 간 경제관련 포럼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천연가스, 전력 등 에너지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한·러 에너지협력 포럼』이 외통부, 주블라디보스톡 영사관, 극동연방대학교 공동 주관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7.19)되었다. 극동지역에서의 물류, 환경, 지역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러 극동포럼』도 한국 측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APEC학회, 국토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러시아 측 극동연방대학교, 극동경제개발센터 공동주관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7.19 ~20)되었다. 또한, 러시아 올란우데에서 한·러 양국 정부, 지자체,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8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7.24)와 제3차 한·러 비즈니스 포럼(7.25)이 각각 개최되었다.

블라디보스톡 APEC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극동연방대학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9.8)을 갖고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과학기술협력 증진,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3각 협력사업 강화, 인적·문화적 교류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외통부와 러시아 지역개발부가 공동 주최하는 러시아 투자프로젝트 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가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12.4)되었다. 설명회에는 러시아 8개 지역 및 1개 비즈니스 컨설팅 기

업이 우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러시아의 투자환경, 투자 프로젝트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에 관해 발표하고 우리 50여 개 기업들과 1대 1 비즈니스상담회를 진행하였다.

2013년 우리의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러 관계도 더욱 발전될 전망이다. 정례적인 외교차관 전략대화·정책기획협의회·국방전략대화 등이 개최되고, 하반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남·북·러 3각 경협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따라서 천연가스관과 TSR-TKR 철도연결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과의 경협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의 주들과 한국의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단기 방문 시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객과 인적 교류가 증대될 전망이다.

- 여인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I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가. 정치동향

2012년은 김정일의 사망으로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체제의 출범원년이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3년 상을 치르고 당 총비서직을 승계했지만 김정은은 아버지의 추모기간을 100일로 끝내고 2012년 4월 일반적인 예상보다 빠르게 당·정·군의 최고 직위에 취임했다. 이미 2011년 12월 30일, 북한의 당 정치국은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고 발표했다. 선군정치에서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2011년 말에 김정일 정권의 종언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서막을 올린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김정온이 당·정·군의 최고 직책을 빠르게 승계한 것은 그만큼 권력 장악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 계 있어 2012년이 대내적으로 한 가지 목표, 즉 김정은 등장의 정당성 강화와 권력기반 공고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한 해라는 것을 말해준다. 2012년 한 해 동안 줄곧 김정일의 위대성과 ‘강성대국’ 진입, 인민생활 향상이 강조되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김정은 통치의 정당성 강화로 수렴된다.

2012년 한해동안 북한정치에서 관례적으로 치르던 중요한 국내 정치행사를 개최하지 않거나 관영매체의 논조가 달라지거나 하는 등의 이상한 조짐은 나타나지는 않았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외부의 주요 관심사는 김정은의 국정장악 능력과 북한 국내정치의 안정성이었다. 김정일 생일(2.16), 창군일(4.25), 김정일 당 사업 개시일(6.19), 김

일성 기일(7.8), 정권수립일(9.9), 창당일(10.10) 등 북한이 매년 거행해오는 중요한 정치적 기념행사는 예년수준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국내정치의 안정성을 시사한다. 각각의 중앙보고대회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 선군기치, 인민생활 향상, 내부단결 등 통상적인 내용이 반복해서 강조되었고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면 잦은 인사교체 정도였다.

2012년에도 북한정권은 당 중심의 사회통제를 바탕으로 한 체제결속을 강조하면서 내부자원과 노력 동원을 극대화하여 경제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이의 일환으로 예년처럼 연초부터 당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지역별 군중대회, 단위별 결의대회를 개최(1.2~6)했다. 이 대회에서는 김정일의 유훈 관철을 주장하면서 강성부흥에의 진입과 김정은 결사옹위 등이 강조되었다.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였지만 2012년의 특징이 있다면 김정일의 유훈 관철과 김정은 중심의 단결이 호소된 점이다.

연초에 북한의 관영언론들은 김정일이 생전에 했다는 발언 내용을 유훈이라며 공개했는데 골자는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그에 대한 충성이었다. 이러한 유훈관철을 위한 선전선동은 인민군 결의대회(1.9)와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6.6)를 포함하여 청년동맹(7.12), 직업총동맹(7.17), 농업근로자동맹(7.18), 여성동맹(7.19) 등의 근로단체 대표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청년동맹 대표자회는 10년 만에 열려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주체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기 위한 청년동맹의 과업”을 결정했다.

2012년에 정치적으로 가장 의미가 큰 행사는 제4차 당대표자회(4.1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4.13)였다. 이 회의에서는 김정은

을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하고 주요 인사를 단행했으며 당 규약과 헌법을 수정했다. 당 규약 개정 결과 김일성 당이 김일성·김정일 당으로 바뀌었고 유일지도사상이 김일성의 혁명·주체사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화했다. 김정일을 영원한 당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최룡해를 보선했고, 정치국 위원으로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를 후보위원으로 곽범기, 오극렬,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을 선출했다. 또한, 당 비서에 김경희와 곽범기가 임명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룡해, 위원에 현철해, 리명수, 김락겸이 선출되었다. 김영춘, 곽범기, 박봉주는 당 부장에 임명되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제를 새로 만들어 김정운을 추대하고 직제 신설에 맞게 헌법 제6장 제2절 제목과 제91조, 95조, 100-105조, 107조, 109조, 116조, 147조, 156조를 개정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를 새로 선출하고 태형철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보선했다. 동시에 리승호, 리철만을 내각 부총리로, 김인식을 내각 부총리 겸 수도건설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로 박태덕, 인민경제대학 총장 전경남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이 밖에도 2012년에는 인사교체가 빈번했는데 자강도당 책임비서에 류영섭, 합영투자위원장에 리광근, 체신상에 심철호, 교육위원장에 김승두, 재정상에 최광진, 기계공업상에 리종국, 청년동맹 1비서에 전용남, 문화상에 홍광순, 황해남도 당 비서에 박영호, 전자공업상에 김재

성, 체육상에 리종무, 금속공업상에 전승훈에 이어 한효연이 임명되었다. 잦은 인사교체는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전 분야에서 세대교체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교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것은 리영호 군총참모장의 갑작스런 해임이었다. 당 중앙위원회는 7월 15일 정치국 회의를 열어 리영호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군 총참모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7일에는 현영철 인민군 대장을 차수로 승진시켜 후임에 임명했다. 북한의 공식적인 보도는 없었으나 11월에는 2012년 4월 7일 차수로 승진하여 인민무력부장에 취임한 김정각이 물러나고 새로 김격식이 인민무력부장에 기용된 것이 밝혀졌다. 이로써 2011년 말 거행된 김정일의 영결식에서 영구차를 호위하여 실제로 추정된 군부인사 4명 가운데 리영호, 우동측, 김정각의 행방이 묘연해졌고 김영춘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 권력지형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권력쟁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불안이 팽배해 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정치적 불안은 사회적 결속과 권력층의 응집력이 약화되어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릴 때 발생한다. 인민생활 향상과 더불어 정권의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손쉬운 방법의 하나는 긴장조성이다. 북한은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3호’를 발사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12월 10~22일에 다시 발사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 아마도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제재 규탄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체제결속의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현재 북한정치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고 사회경제적 변화도 심화되고 있다. 유례없이 ‘분주소장 회의(11.23)’와 ‘사법검찰일꾼열성자 대회(11.26)’를 소집하여 단속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문제는 인민생활 향상에서의 성과부족으로 인한 정권의 정당성 약화와 사회통합의 이완, 그리고 대외관계의 악화이다. 북한체제의 성격상 권력 내부에서 일부 군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것이 김정은 정권을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2013년도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내부적으로 ‘강성대국에의 진입’을 체감하도록 경제난 완화를 통해 얼마만큼의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대외적으로는 적어도 적대적이지 않은 주변국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2013년은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정권 등장 2주년이자 강성대국 진입 2년차, 정권수립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으로서는 무엇보다 주민생활 개선 등의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해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사상적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과 사상교양을 예년처럼 반복할 것이다. 특히, 정권 2년차를 맞아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군부의 충성 확보가 절대적이므로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와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교덕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경제동향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갑자기 출범한 김정은 체제는 2012년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일의 ‘유훈’을 강조하고 2012년을 ‘강성부흥’의 해로 빛내자고 역설하였으며, 2012년 강성국가에 진입하는 것이 김정일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독려했다. 경제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는 기치 하에서 부문별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예산 편성 방향에서도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자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하고 2012년을 ‘강성부흥’의 해로 빛내기 위한 주요 사업들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키자고 선동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전후하여 발표된 김정은 제1비서의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과의 담화(4.6), 100번째 ‘태양절’을 기념하는 열병식장에서의 연설(4.15), 그리고 최고인민회의(4.14)에서 제시된 올해의 과업 등을 종합하면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정책목표는 선군정치와 경제강국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과제로 인민생활 향상과 생산기반의 구축 및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지식경제강국 건설 등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사업의 내각 주도권을 주문하였다. 또한, 김정은의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의 담화(4.27)에서는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김정은은 ‘평양시 꾸리기’를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강조하였

으며 지하자원 수출과 개발을 장기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8.3)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따라 배울 것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김정일의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태도를 본받자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북한은 경제정책에서 별다른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김정일 시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2012년 신년공동사설과 최고인민회의 보고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문별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을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으로, 경제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 내용에서는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과 기본건설부문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게 책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는 전력과 석탄의 생산능력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며 국영기업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4대 선행부문의 생산력 증가가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기초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예산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교육, 보건, 사회보장, 체육, 문화 부문에 대한 국가적 배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기존과는 달리 인민시책비의 세부영역별 예산지출 증가율을 높은 수준에서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수출품 생산기지의 활성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및 합영·합작의 확대, 그리고 다른 나

라와의 경제기술협력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강성부흥의 해’로 빛내자는 정책 목표를 고려하면 2012년 북한경제의 실적은 초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우며 우선적으로 강조된 경공업과 농업부문을 보면 경공업부문에서는 2011년 수준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설비를 확충하고 현대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도된 경공업 공장들은 대부분 평양시 인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AO/WFP 추정치에 따르면, 식량생산 실적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증산의 이유로는 경사지면적에 대한 추정치가 25만 헥타르 증가하였으며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가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된 점, 그리고 여름 이후 기상 여건이 좋았던 점을 들고 있다.

전력과 석탄부문에서도 약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력의 경우에는 희천발전소의 준공으로 전력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석탄은 대중국 수출이 2011년에 이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증가를 추정할 수 있다. 공업부문에서는 그동안 대표적인 성과로 강조해왔던 주체산업부문(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등)의 실적이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북한경제의 최대 실적은 건설부문에서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2012년을 ‘강성대국에 진입하는 해’로 만들자는 기치 아래 각종 대형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12년 북한경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형종합쇼핑센터가 연이어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합작으로 대형쇼핑센터인 ‘광복지구상업중심’을 개업(1.5)한 이후 영웅거리에 ‘만수교고기상점’을 준공(4.25)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창전거리에 종합쇼핑몰인 ‘해맞이식당’을 개

장하였다. 이 중에서 ‘광복지구상업중심’에는 북한기업의 상품과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어 국가가 관리하는 상업 유통망을 통해서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통치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2013년에도 2012년의 경제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도자로서의 정통성과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식량문제의 해결과 전력생산 증대 및 공급 확대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지원을 확보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외경제관계 확대 노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제부분의 관리체계 개선과 대외경제개방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관리체계 개선은 공식경제부분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협력 확대는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치와 선진기술의 도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 다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제한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당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13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

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새로 출범하는 남한의 차기 정부와의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국가 등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임강택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다. 사회동향

2012년 북한 사회 부문의 특징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선전 사업 강화, 김정은의 민생행보, 교육 분야의 부분적 개혁·개방, 문화·관광교류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2012년 사회문화 부문의 정책 초점 역시 정권 안정화를 위한 선전사업과 내부 결속력 강화에 있다. 2012년 신년사설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곧 위대한 김정일 동지이시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를 강조하고 계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광명성절 제정, 김정일 태양상 및 영생탑 건립 등 김정일 수령영생사업을 추진하였고 김정은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물과 찬양 노래, 예술작품을 보급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계승성과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선전·사상교양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한편,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선포되었던 2012년에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지 못하였다. 연초에 북한 당국이 인

민생활향상을 우선과제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배급은 UN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봄 가뭄과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오히려 식량 사정은 악화되고 쌀값을 비롯한 물가가 급등하여 주민들은 여전히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활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과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김정은은 극장, 공원, 유원지, 백화점, 식당 등 주민편의시설을 시찰하는 등 민생행보를 지속했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주택 10만 호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고 하천정비 사업과 공원 리모델링 사업, 평양항공역 개축이 이루어졌다. 이 이외에도 평양시에서는 만경대유희장, 평양민속공원, 통일거리 운동센터, 류경원, 인민 야외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의 신축 및 보수작업이 진행되었다. 김정은은 주민편의시설 건설현장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산업현장을 여러 차례 현지지도 하는 모습을 통해 늘 주민들의 곁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였다.

2012년 북한 사회부문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요소는 교육 분야의 개혁과 교류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당국은 신년사설에서 2012년도 과업으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의 발전·강화를 촉구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 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교육 부문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향성 하에서 9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는 기존의 4-6제 초·중등교육을 5-3-3제로 개편하고, 1년간의 취학전 의무교육을 포함하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제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

제 조치 대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컸던 김일성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이 주민들의 관심사인 교육 문제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한 것이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는 초등교육 기간 연장을 통해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초기중등과 후기중등교육을 분리함으로써 후기중등교육에서 산업의 요구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표준에 보다 가까운 형태의 학제로 개편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 하에서 경제, 무역,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파견하는 기술연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경제·무역 분야의 경제시찰단 1천여 명의 중국 선양, 다롄, 옌지, 상하이 등지 민간 기업 시찰, 라진-하산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관련 기술자 24명의 러시아 기술연수, 황금평·위화도특구, 나선특구 담당 관리 100명의 경제특구 관련 중국 연수 등,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전문가들의 해외연수와 시찰이 이루어졌다.

2012년 들어 국제사회와의 문화·관광 교류가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북한은 런던에서 열린 제30회 하계올림픽에 11개 종목에서 51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로 20년 만에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이어 열린 제14회 하계 장애인올림픽에도 첫 출전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친교농구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농구선수단과 경기를 치르고 어린이 농구교실을 진행하는 등 스포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음악 부문에서는 프랑스에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지휘 하에 북한의 은하수 관현악단이 프랑스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공연을 하였다.

관광분야의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수년간 북·

중 간 관광협력이 지속되면서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의 명승지를 여행하는 여행 코스가 십여 개로 증가하고, 교통수단과 관광형태도 전세기, 기차, 자가용, 유람선, 도보관광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북한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적용하던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고, 일부 지역에서 무비자관광을 개시하는 등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 이외에 대만, 러시아, 영국, 스웨덴과도 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3년 북한 사회를 전망하는 키워드는 김정은 영도체계에 대한 주민 지지기반 확보와 ‘세계적 추세’의 추구이다. 2013년에 북한 당국은 김정은 영도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기업소, 군대 등 주요 조직단위와 대중매체를 통해 김정은의 계승성과 통치능력,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김정은은 민생과 직결된 경공업 및 농업 부문,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현지도와 같은 민생행보를 지속함으로써 주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생활고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무마해 김정은 체제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할 것이다. 2012년에 장성택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설치되고 북한 전역에서 체육환경 개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과 같이 체육이나 군중예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김정은 영도체계에 대한 동의를 창출하는 전략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둘째, 2012년에 단행되었던 학제개편이나 전문가 해외연수, 관광규제 완화 등의 흐름은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기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

적 노력이라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함께 참관한 바 있는 미국의 만화 캐릭터와 영화음악이 파격적으로 등장한 모란봉악단 공연에 대해서 조선신보는 그것이 “경제와 문화 등 국가건설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 앞서나갈 데 대한” 김정은의 방침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개혁·개방의 가능성과 연결시키는 관점을 경계한 바 있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정은은 국토관리 관련자들과의 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제사회의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대표단을 외국에 파견하여 자료를 수집해오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외국 생활을 경험한 젊은 지도자에게 있어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관계개선은 국제적 표준에서 한참 동떨어져 있는 북한 사회의 제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김정은 영도 체계의 공고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급속한 개방은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부문의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적 추세’의 추구는 당분간은 국내적 통제의 강화를 동반하면서 보다 안전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조정아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라. 군사동향

1월, 김정은은 첫 공식 활동으로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함으로써 선군정치를 계승하고 그의 최고 군사 지도권을 과시함과 동시에 권력공고화 작업에 돌입하였다. 북한 당국은 육·해·공군 장병들이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김정일위원장 유훈관철 및 김정은부

위원장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여 김정은에 대한 북한군의 충성 유도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알림과 동시에 그의 최고 군사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다지는 충성강화 활동도 이어졌다.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가운데 군사 퍼레이드 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군사 퍼레이드가 김정일 사망 전부터 평양에서 대규모로 준비한 것으로서 김일성 생일 100주년과 인민군 창건 80주년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등장과 충성구조 다지기위한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군대의 동계 군사훈련상황은 별 특이 사항 없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공군 전투기 훈련은 다소 증가하였다. 북한 전투기는 동계훈련이 시작된 이후 이착륙 비행과 원거리 비행훈련 횟수를 늘린다거나 전시에 대비해 군 보관시설에만 150만 톤의 전시용 유류를 비축해 놓고 있는 정도이다. 당시 북한 전투기는 황해도 상공에 설정된 전술조치선(TAL)에는 접근하지도 않았을 정도로 신중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월, 북한은 NLL인근 공기부양정 기지를 완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황해도 고압포에 건설 중인 공기부양정 기지가 최근 위성사진 판독 결과 완공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서해 5도 일대에서 2월 20일 실시 예정이었던 한·미군사훈련과 관련, “군사적 도발이 시작되면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

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이날 공개통고장을 통해 “조선 서해 우리 측 영해수역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라며 “일단 우리의 해상경계선을 넘어 이 수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 시작되고 우리 영해에서 단 한 개의 수주(水柱, 물기둥)가 감시되면 그 즉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더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킨 서남전선지구에 있는 인민군 제4군단 사령부 예하 군부대들을 시찰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김정은이 최전방에 있는 4군단 산하 제403, 688, 493, 641 군부대 예하 대대 등을 잇달아 시찰하고 전투태세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정은은 이 같은 군사행보를 통해 대내적으로나 대남 차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군 최고지휘관으로서 국가 최고 지도자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나가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3월, 북한은 육군 제1사단이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파주 일대에서 지상협동훈련 실시를 공표한 것과 관련 “대결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해군 2함대 방문시 정승조 합참의장이 한 대북발언(“절호의 기회, 복수, 백배 천배 응징” 등)에 대해 “대결에 환장한 날강도적인 궤변”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대결수위를 높였다. 특히, 북한 당국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15)을 맞아 ‘광명성3호 위성(장거리 로켓)’의 발사계획을 밝힘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김 주석 생일을 맞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며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운반로켓 ‘은하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밝혔다.

4월, 북한은 예정대로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3호 위성’이 발사됐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함으로써 미사일 시험발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낮 12시3분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가 궤도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국영문 기사를 통해 “조선에서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발사가 13일 오전 7시38분 55초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됐다”며 “지구관측위성의 궤도 진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현재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예정대로 15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으며 여기에서 신형 탄도 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그들의 군사적 위력을 시위하였다. 이어 19일에는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우리에게는 우주개발기구들을 최첨단 요구에 맞게 확대강화하고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리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광명성3호’가 궤도에 오르지 못한 원인에 대해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끝낸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지난 달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열린 다음 날 서해안에서 단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천명함으로써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25일에는 평양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군 건군 80돌 경축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5월, 북한은 “우리는 자위적인 핵 억제력에 기초해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강성국가를 보란 듯이 건설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을 중단 없이 지속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대남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면서 리영

호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군사대표단을 라오스로 파견하는 등 대외적 군사 활동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9월, 북한은 27일 평안남도 서해안에서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몇 발을 시험 발사했고(9.27) 이 미사일은 서해상으로 80~90여 km를 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일상적인 성능 개량의 일환일 수 있지만 시점상 우리 정부에 대한 일련의 군사적 위협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북한은 군대 내 청년동맹 초급간부대회를 10년 만에 개최하여 북한군대의 충성구조를 재점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인민군 중대 청년동맹 초급단체위원장 대회가 31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엄향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인민군위원회 위원장, 인민무력부 일꾼 등이 대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하였다.

11월, 북한에서는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미국은 11월 초 북한의 평양시 산음동에 있는 무기 공장에서 미사일 부품으로 보이는 화물이 평안북도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기지 조립동으로 운반된 것을 위성사진으로 포착하였으며 위성에 포착된 화물의 모습은 지난 4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연평도 포격 2주년을 맞아(11.23) 연평도 인근인 황해남도에서 군·민 연합모임을 열고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를 벌여 북한 주민들과 군대에 승리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2월, 북한당국은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담화형식을 빌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

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며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대변인은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은 전번(지난번)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케트는 ‘은하-3’”이라고 설명했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4월 진행한 위성발사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하고 위성과 운반 로케트의 믿음성과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다”며 “이번 위성발사는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을 힘 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2013년도 북한의 군사동향은 새로 공식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공고성을 시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질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선군정치 세습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와 다름없는, 공고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군사적으로 대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당국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4월) → 실패 → 재강행(12월)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미 준비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벌여 김정은 체제의 강대성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김정은이 다양한 군사현지지도를 벌이도록 하여 북한 군사최고지휘관으로서의 김정은 상을 군부 내에 각인시키고 ‘선군시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굳혀나가고자 하였다. 반면,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과 같은 극단적인 대남 행태는 자제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단지 남한을 위협하는 각종 군사적 비난 또는 군사적 움직임을 포착되었지만 직접적인 군사도발은 피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군사적 태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2012년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을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을 되풀이하는 군사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차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성공 이후 미·북 간 협상구도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곧 바로 관계개선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북한은 일정기간 동안 남북 간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분적인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2012년보다는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2. 대외관계

가. 북·미관계

김정일 사망과 100일간의 애도기간을 거친 후 미·북관계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출발했다. 그것은 북한의 새로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신호가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북 간 2·29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2월 29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의 일시 중단, 그리고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 합의했다. 2·29 합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일각에서는 김정일 사후 100일간의 추도기간을 고려할 때 새로운 합의가 이렇게 빨리 나온 데 대해 놀라워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북 간 우호적인 분위기는 북한이 광명성3호 로켓 발사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북한은 4월 13일 직접 초청한 80명의 외신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광명성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3호 로켓을 발사했다. 결국, 광명성3호는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로켓 발사도 실패로 끝났다. 이로써 김일성 탄생 100 주년과 김정은의 권력 장악 선포를 축하하는 축포의 성격이 짙었던 로켓발사는 미·북 간 관계 악화만을 남기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약속한 2·29 합의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2·29 합의에 포함되어 있던 식량지원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으로부터의 정책과는 별도로 미 의회도 북한을 압박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 4년 연장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 의회는 또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상원은 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6.20).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한 미·북 적대관계가 주를 이루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미·북 간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이 접촉에서 북측은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비핵화는 요원하며 북한이 더는 미국과의 2·29 합의에 흥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역시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UN 연설에서도 반복했는데 이는 곧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전쟁직전의 상황에 봉착했으며 북한의 핵무기가 전쟁을 억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UN 대표 연설에 대해서 미국은 별로 놀라울 것이 없다면서도 김정성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바마 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은 지난 4월에 이어 또 한 번의 로켓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미 12월 중순 경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공표를 했으며 7일 현재 그것을 위한 준비가 거

의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 12월 중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12.12) 당분간 미·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2013년의 초반의 미·북관계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 의회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은 미·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은 정권 2기에 외교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이나 심지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조차도 집권 2기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경책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외교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북 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한국 정부와의 공조임을 고려할 때 오바마 2기 행정부는 2013년 초반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김동수 통일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나. 북·중관계

2012년 북·중관계는 상호의존의 큰 틀 속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진 행된 한 해였다. 중국은 북한의 신생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후원함과 동시에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 반면, 북한은 정권안 착과 재원확보를 위한 중국 의존전략을 지속시키면서도 중국의 관여 확대를 경계해왔다.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중국과 의 공식 외교 교류에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푸잉 부부장의 비 공식 방북(2.20)을 통한 식량원조, 북·중 전략대화(4.21), 탈북자 강제 북송 등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한 행보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처음으로 양국 외교장관 회담(7.11)이 성사되어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의 김정은 면담(8.30) 등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행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 북·미 간 2·29 합의라는 초기의 유화적 분위기와 중국의 명백한 반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를 2차례나 강행했 고(4.13, 12.12), 헌법 개정을 통한 핵보유국 선언까지 하면서 중국을 곤혹스럽게 했다. 또한, 중국 언론이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비판한 것에 대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고성을 지 르며 항의한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북한은 중국의 관여와 상관없이 독 립적 군사행동을 자행했다.

중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동의(4.17)하고 뒤 이어 북한의 중국어선 나포 사건(5.8)에 따른 북·중 갈등이 발생하면 서 양국관계에 이상기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한반

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입장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 이후 중국이 즉각적으로 북한 대사를 긴급 초치한 사건(3.18)이라 던지, 2차 발사 계획 발표(12.1)이후 북한이 평화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북한을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로켓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에 제한을 받는다고 이례적으로 발표(12.3)한 것은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중국이 올해 북한의 3차 핵실험 방지를 위해 직간접으로 북한에 상당한 압박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북·중 정치적 긴장에 일조했다는 후문이다.

경제협력 분야는 2011년 성과에 탄력을 받으며 지속성을 유지했다. 올 초부터 백두산 부근에 국가급 경제합작구 건설 추진(1.11), 중국의 북한 라선 특구 내 4-6호 항구 건설과 사용권의 확보(2.15) 소식이 전해지는 등 중국의 북한 투자 열기가 가속화되는 분위기였다. 이를 증명하듯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지방정부와 북한과의 교통, 자원,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중국과 북한 경제특구를 잇는 도로 등 인프라 공사에 가속도가 붙었고, 금강산 관광루트 정식 개통,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착공(5.30), 신두만강대교 건설 계획 등이 추진되었다.

중국의 투자 확대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행보도 포착되었다.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6.28 새 경제관리체계 실시를 선언하면서 북한체제는 경제개혁에 대한 중국의 기대를 높였고 중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토지, 세금 우대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단둥, 장춘 등 중국 지역에서의 종합 박람회 및 투자설명회(9, 10월)까지 개최

하였다.

한편, 인적교류도 활발했다.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나선 특구 담당 관료들이 중국에서 경제 관련 연수를 시행했고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인력송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투자와 경험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불안정성 역시 수면에 드러났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8.13~18)과 함께 황금평·라선 관리위원회 출범 합의 및 중국 대형 국유기업의 투자 확보 등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투자 의지가 표출되는 것 같았으나 중국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에 투자했다 실패한 시양그룹 사건 등이 대서특필 되고,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이 중국의 투자를 원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시장 체제 도입과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2013년은 시진핑 지도부가 본격 행보를 시작하는 첫 해이며 미국의 오바마 2기 정부 및 한국과 일본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북아 주요국들의 대북 정책 행보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내적 불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국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한 변화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은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및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안정 및 붕괴 방지는 중국의 안보 및 발전이익에 핵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 발사 등 군사적 도발 여파가 확대된다면 중국에 계도 북한에 의한 전략적 부담이 과거와는 달리 무겁게 인식될 수 있다. 북한 안정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 대북정책의 기초가 변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중국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강한 압박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 3차 핵실험 방지를 위해 북한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정학 게임의 2013년 판도는 중국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 후견국 활용 전략은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제재보다는 결국 개혁개방 견인을 선택할 것이고, 북한 역시 군사도발 카드와 경제개혁 카드를 적절히 섞어가며 주변국들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를 올림과 동시에 중국의 후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기존의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기현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다. 북·일관계

노다 정권의 등장 직후 북한이 일본에게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하며 북·일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북·일관계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2012년에 접어들면서 북·일 대화의 재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일본 정부는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어민 3명을 신속하게 돌려보냈고(1.9), 나카이 히로시 전 납치문제담당장관이 2008년 8월 이후 중단된 북·일 교섭과 일본인 피랍자 문제의 재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와 비밀접촉을 가지기도 했다(1.10).

이후 북한의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김정은 체제에서 외교적 업적을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교착상태의 북·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일 접근을 꾸준히 시도하였다.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의 대일 접근과 관련해 나카이 히로시 전 납치문제담

당장관도 외무성 관료들의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차기 총선의 대비 등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였다. 나카이 히로시 전 납치문제담당장관과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북송 일본인 처’의 일시 귀국, 요도호 납치범의 송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기에 북한에 잔존해 있다가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반환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다쿠쇼쿠대학의 마나베 사다키 교수 등 일본 측 관계자와 접촉한 뒤 기자회견(3.17)을 통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일본인 피랍자 문제는 유보하고 ‘북송 일본인 처’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 접어들어 이와 같은 북·일 간 빈번한 접촉의 결과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의 평양 초청(7.21~8.4), 북·일 적십자 회담(8.9~10), 북·일 정부 간 회담(8.29~30), 북·일 국장급회담(11.15~16) 등이 이루어졌다.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1989~2001년에 북한에 체류하였던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일의 초청에 의해 탈북 후 11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였다. 탈북 후 일본에 돌아온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일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예측하기도 했는데 이번 방문에서 김정일과 이설주, 김여정, 장성택 등을 만나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후지모토 겐지의 초청 의도와 관련해서는 김정일의 개방적 리더십을 홍보하고 북·일 평양선언 10주년을 앞두고 북·일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겐바 외무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가

운데 베이징에서 북·일 적십자회담이 10년 만에 개최되었다(8.9~10). 동 회담에서는 ①전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이 매장된 묘지 참배, ②일본인 유골의 반환 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이를 위한 북·일 정부 간 협의 개최가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중단된 북·일 정부 간 협의가 4년 만에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8.29~30). 북·일 베이징 적십자회담에서는 외무성 국장급 회담으로 합의되었지만 북한의 요청에 의해 과장급 회담으로 개최되었다. 북·일 과장급 회담에서 ①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이 매장된 묘지 참배, ②일본인 유골의 반환 문제, ③‘북송 일본인 처’의 귀국 문제, ④일본 항공기 요도호 납치범 송환 문제 등을 국장급 회담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은 큰 이견 없이 합의되었으나 ‘일본인 납치 재조사 문제’는 북·일이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노정하는 가운데 국장급 회담의 의제로 상정되었다.

동년 8월의 북·일 베이징 적십자회담에서 양국이 일본인 성묘 합의에 따라 북한은 2012년 8월 말부터 일본인 성묘객의 방북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2012년 8월 말 일본 민간단체 ‘전국청진회(全國淸津會)’ 회원들의 방북을 허용하였고 이어 9월말에는 일본인 성묘객 16명의 평양근교 ‘용산 묘지’ 참배를 위한 방북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북·일의 접촉은 몽골 울란바토르 북·일 국장급회담(11.15~16)으로 진전되었다. 애초 북·일 국장급회담은 북한의 느긋한 태도로 인해 11월 개최가 불투명하게 되었는데 일본 총리실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회담에서는 ①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전보장과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논의 심화, ②북·일 평양선언의 관계개선 이정표, ③후속회담 조기 개최 등이 합의되었다.

북·일 국장급회담 직후 북한의 송일호 국교정상화 대사는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이전에 비해 ‘많은 문제’를 다루었고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일본정부도 북·일 국장급회담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일본과 북한의 접근은 양측의 전략적 이해에 의한 것인데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는 ‘체제 및 리더십의 개방성’ 등 변화를 보이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 정부 간 채널 확보 등을 시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를 향해 ‘대화의 시그널’을 간접적으로 보내려 하였다.

아울러 노다 내각의 총리실이 북·일 국장급회담의 성사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을 미루어 추론할 때 노다 총리는 동북아 외교 실패에 대해 북·일관계 개선을 통한 상쇄 및 외교적 성과 확보, 조기 총선정국에서의 전략적 활용 등을 위해 대북 적극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총선(12.16)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영향으로 자민당이 압승, 강경 보수 성향의 아베 자민당 정권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북·일관계는 일본인 납치 재조사 문제의 진전 없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일본의 대북정책은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른 전략적 공조를 기반으로 추진될 것이다.

- 배정호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라. 북·러관계

양국 관계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서방과 같은 비난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후퇴하였으나 김정일 사망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다. 양국 경제관계의 장애요인이었던 북한의 채무문제가 마침내 타결되었고,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 소량의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였다.

정치면에서는 기념일 연회 개최, 축전 교환 등을 통해 양국 간 전통적인 선린관계가 지속되었다. 2011년에 사망한 김정일의 70회 생일(2.16)을 맞아 주러 북한대사관은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상·하원 의원 등이 참석하는 연회(2.14)를 열었다. 또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오랜 친선과 호상 존중의 전통에 기초하는 러·북 협조가 조선반도와 아시아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는 축전을 보냈다. 특히, 푸틴 총리는 대선(3.4)을 앞두고 선거운동 차원에서 러시아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 기고문(2.27)에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의 견고성을 시험하려 해서 안 된다”고 밝혀 러시아가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푸틴 총리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김 부위원장은 축전을 보내 당선을 축하하고 “전통적인 조·러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사이에 이룩된 합의들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주북한 러시아대사에 티모닌 특명대사가 임명(4.6)되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그는 지금까지 러시아 외교부에서 남·

북·러 3각 협력 사업을 담당해 왔다.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메드 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북·러 관계가 앞으로도 호상 존중과 선린에 기초해 두 나라의 복리와 지역적 안정과 안전에 부합되게 발전하리라고 믿는다”는 친서(4.10)를 보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기념식(4.15)에 아브테예프 문화장관이 이끄는 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데 러시아는 사실상 이날을 김정은의 공식 취임일로 간주하였다.

김정은은 러시아 국경절에 즈음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6.12)을 보냈다.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김영재 주러 북한대사는 모스크바에서 양국의 상호교류 강화, 변방지역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교류 증대에 우호적인 조건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경조약을 체결(7.5)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러시아가 큰 수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내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했다(7.9).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광복절 67주년을 맞아 인사문과 축전을 서로 주고받았다.

북핵문제와 관련 푸틴 총리는 상기의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은 비확산 체제를 침해하면서 핵무기 보유 권리를 주장하고 이미 두 차례 핵 실험을 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줄곧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 왔으며 조속한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데니스프 외교부 제1차관과 회담(3.14)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밝히자 러시아 정부는 실제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3.16)하였다. 북한의 실질적인 로켓 발사(4.13)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안보리 1874호 결의에 위배됨을 강조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는 반대하였다. 러시아 언론은 로켓 발사의 실패는 핵위협의 사거리를 포함하여 북한 첨단무기체계의 미래를 의심스럽게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재차 장거리 로켓을 발사(12.12)한 것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사회의 의견에 반하는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의 위반이라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지역에서 약속된 다자간 경제협력 프로그램들의 이행을 매우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들에 반하는 새로운 행동의 중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다른 관련국들에게는 상황을 더 긴장시키거나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다른 사안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형식인 6자회담의 재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삼가도록 요구하였다.

경제면에서 북한 경제대표단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를 방문(2.13)해 주정부 인사들과 양측의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북한과 아무르주는 농업, 목축, 임업, 요식업 등에 걸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83억 루블(약 3,500억 원) 규모의 라진-하산 52km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러시아 극동철도(FER)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 관련 전문가 33명이 러시아의 철도 전문기관에서 7주간 연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21).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모스크바를 방문(3.14)해 테니스프 외교부 제1차관과 북한 경유 러시아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지린 라디오방송의 인터넷판인

지린광파망(廣播網)에 의하면(5.25)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과 북한 나선, 러시아 하산을 잇는 ‘3국 무비자 관광’이 개시되었다.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 또한 마침내 타결되었다. 스토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이 평양을 방문(5.31~6.2)하여 북한 측과 합의하고 관련 협정에 서명(9.17)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채무 약 90%를 탕감하며 잔여 10억 달러 이상을 북한에서 공동교육·보건·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를 원조로 대체’하는 계획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북·러 양국은 해외파견 노동자의 노동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그룹회의 의정서를 조인(10.5)했는데 201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정식 취업허가를 받고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가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벌목, 농업, 건설 분야에 진출해 있다. 2012년에 러시아는 인도적 차원에서 7월 2,000톤, 8월 2,000톤, 9월 4,000톤의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도 북·러 양국은 고위인사 교류와 축전 교환 등을 통해 선린협조관계를 지속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하지 않는 러시아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푸틴 대통령은 천연가스관과 TSR-TKR 연결 등을 위해 남·북·러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 아무르주 자비틴스크 지역 농지 1천 헥타르를 임대해 2013년부터 북한 노동자를 투입해 콩, 감자, 채소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벌목, 농업, 건설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규모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인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 대남동향

2012년 북한의 대남 동향은 남한과의 대화 제의를 비롯한 긴장완화 조치가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방과 비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형성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부정적 대남 인식은 대통령과 통일부에 대한 비방으로 나타났다. 통일전선전술은 여전하였고 특히, 2012년에는 남한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에 대한 비난이다. 북한은 2012년 벽두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특별국정연설(1.2)에 대해 ‘우리민족끼리’와 조평통 서기국 보도(1.5)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조평통 서기국 상보(1.4)’ 등을 통해 북한은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역도’라고 하는 등 험한 비난을 하였다. 북한은 통일부의 연두 업무보고(1.5) 및 업무보고시 대통령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비난했다(1.8, 1.9, 우리민족끼리·1.11, 중통). 북한은 중통 논평(1.19)과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대통령의 전방 부대 방문 시 발언(“북한은 호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철통같이 해야 한다”)을 비난했다. ‘기회의 창’ 등의 발언과 관련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회견(1.19) 및 중통(1.17) 등을 통해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을 비난했다(1.17, 1.19, 중통).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4.28 국가재정전략회의 및 4.30 민주평통자문회의 시 ‘통일항아리’ 관련 언급에 대해 비난했다.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 형식(5.17)으로 한·중·일 정상회담(5.14, 베이징)시 북한문제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5.17, 중통). 북한은 8.16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기사문답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난하였다(8.16, 중통).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시 NLL 고수 발언을 비난하며 NLL을 불법 유령선이라고 주장하였다(10.20, 중통).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1.10)’ 기사 및 노동신문 보도(1.13)를 통해 비난했다. 통일연구원·조선일보 주최 세미나(1.18)시 통일부장관 축사에 대해 북한은 ‘반공화국대결광신자들의 허거운 녀두리’라고 비난하였다(1.23, 1.26,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북한은 하나원장 직급 격상, 남북자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공개정보센터 등 통일부가 추진 중인 사업을 비난하였다(2.1, 2.2, 우리민족끼리). 북한은 통일부장관의 민화협 조찬 강연(2.1), 국회 상임위 보고(2.6) 등에 대해 비난했다(2.6, 2.9, 우리민족끼리). 통일부장관이 통일항아리 빛기 행사(5.12)를 가진 것과 관련하여 북한은 통일부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다(5.22, 노동신문·중통).

둘째, 대남 비난 및 위협이다. 특히, 북한은 남한의 군사훈련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남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북한은 중통 논평(1.28)을 통해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2.27~3.9)을 비난하였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2.4)를 통해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쌍룡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였다. 우리군의 서해 5도 해상사격 훈련에 대해 북한은 조평통서기국 보도 및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공개통고장’ 등을 통해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였다(2.19, 중통). 아태평화위 반핵평화위 평화옹호전국민족위 등 3개 단체 합동성명으로 북한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3.26~27)를 비난하였으며(2.22, 중통) 중통·노동신문 등을 통해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지속적으로 비난하였다. 국방위 대변인 성명(2.25), 외무성 대변인 담화(2.27),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2.29) 등을 통해 북한은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지속 비난하였다. 북한은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이 ‘최고준엄’을 모독하였다고 비난·위협하였다(3.2, 중통). 우리군의 ‘대적구호’에 대해 북한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3.2)을 통해 ‘최고준엄 모독’이라고 비난·위협한 이후 국방위 기자회견(3.3), 조평통·외무성 담화(3.4) 등을 발표하는 한편, 평양을 시작으로 지역별 군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 및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비난하였다. 북한은 핵안보정상회의 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해 비난하였다(3.30, 중통).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비난하였다(4.5, 중통).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4.23)를 통해 북한은 우리가 ‘최고준엄’을 모독했다며 ‘특별행동’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조평통 대변인은 중통기자의 질문에 대답(5.10)하는 형식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비난하였다. 북한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5.18) 형식으로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를 비난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돌(6.6)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은 우리가 최고준엄을 모독하였다며 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6.4), 청년동맹·조선소년단 연합성명(6.5)을 통해 비난·위협하였다(6.4, 중통·중방, 6.5, 중통). 북한은 평화옹호전국민족위를 내세워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 한·미·일 연합훈련

(6.21~22), 한·미 해상훈련(6.23~25)을 비난하였다(6.22, 중통). 북한은 대남단체 합동성명(8.19,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조국평화통일위·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민족화해협의회)을 통해 우리의 을지포커스가디언(UFG)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였다(8.19, 중통노동신문).

북한은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8.21, 중통·중방)과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우리의 을지훈련을 비난하였다(8.27, 노동신문).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명의 보도를 통해 북한은 우리 측의 경고사격을 거론하며 이는 다른 나라 어선들의 어로작업을 빌미로 한 군사적 도발로 강력한 타격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하였다(9.22, 중통). 조평통 대변인 담화(9.23)를 통해 북한은 우리군의 NLL 침범 북한어선 경고사격 퇴거 조치를 비난하였다(9.23, 중통). 또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비난하면서 ‘우리도 강력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하였다(10.10, 중통). 10월 19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 공개통고장을 통해 북한은 우리 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조준격파,” “군사적 타격” 등으로 위협하였다(10.19, 중통).

셋째, 남한 선거에 대한 개입이다. 북한은 남한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였다. 이는 남한 정치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해보려는 전술의 산물이다. 북한은 ‘민족21’ 대표의 간첩활동 수사에 대해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파국적 위기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모면하고 선거정세를 역전시켜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하였다(3.6, 중통). 4.11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3.30, 3.31, 중통). 아울러 4.11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대남

·외곽단체를 활용하여 현 정권 심판을 선동하였다(4.9, 중통).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9.27)을 통해 북한은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난하였다(9.27, 중통).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기자문답(9.29)을 통해 북한은 NLL 관련 우리 정부 및 주요 인사 입장을 비난하였다(9.29, 중통). 10월 12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한은 이 대통령의 “적의 도발 억제” 발언에 대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10.12, 중통).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한은 한·미의 “북한 도발 대응태세”를 비난하였다(10.27, 중통).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을 통해 북한은 우리 측이 “북풍조작책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11.2, 중통).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한은 새누리당의 국민대통합을 ‘보수대연합’으로 비난하였다(11.3, 중통). 11월 8일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을 통해 북한은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통일분야 공약(11.5 발표)에 대해 “전면대결공약, 전쟁공약”으로 비난하였다(11.8, 중통). 북한은 11월 15일 직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측 노동자들에게 “반 이○○, 새누리당 투쟁의 기수, 선봉대가 되어 보수패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 등으로 선동하였다(11.15, 중통). 또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한은 대통령 및 새누리당의 “북 대선개입” 발언을 비난하였다(11.16, 중통).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을 통해 우리 측의 연평도 포격 2주년 행사 관련, “연평도 참패를 만회하고 대결의식을 고취하여 보수정권을 연장하려는 발악”이라고 비난하였다(11.17, 중통).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대변인 중통문답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의 ‘외국인 대상 금강산관광 중단 촉구’ 관련, “엄중한 주권침해행위이며, 관광재개를 위해서도 대결광신자들의 재집권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11.22, 중통). 노동

신문 보도를 통해 북한은 우리 측의 ‘북 대선개입’ 지적을 비난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6·15, 10·4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관련 입장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1.28, 노동신문). 조평통서기국은 공개질문장을 통해 ‘대북정책 기본입장’을 질문하면서 “이○○패당의 대결정책과 결별하고 진자로 그와 차별화 되고 변화된 대북정책 공약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12.1, 중통).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최근동향 및 북한미사일 발사관련 발언(‘도발 제재’)에 대해 “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최후발악”이라고 비난하였다(12.14, 중통). 한편, 중앙통신은 ‘새누리당 후보당선’을 간접적으로 보도하였다(12.20, 중통). 조선신보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난하면서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비난대신 향후 대북정책추진방향과 관련 ‘대결인가 대화인가’라고 질의하였다(12.21, 중통).

넷째, 대남 통일전선전술이다. 전통적인 대남 통일전선전술을 통해 북한은 남한 내 갈등을 유발시키려 하였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를 평양에서 진행하고 호소문을 채택하였다(1.31, 중통·중방). 6·15 남북위 접촉에 대한 정부의 수리 거부에 대해 북한은 비난하였다(2.9, 우리민족끼리).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적십자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북한은 “전쟁책동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기만적인 대화제안 놀음”이라고 비난하였다(2.15, 우리민족끼리). 북한은 우리가 김일성 주석 100돌 행사 기간 최고존엄을 모독했다고 주장하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조평통 성명, 정부·정당·단체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비난·위협하였다(4.18, 중통). 5월 15일 체신성 대변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북한은 GPS 교란 행위 자행 사실을 부정하고 우리 정부의 모략극이라고 비난하였다(5.18, 중방). ‘5·24 조치’ 2주년을 맞

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10.3.26)에 대한 제재로 실시한 '5·24 조치'에 대해 비난하였다(5.24, 우리민족끼리).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한은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반정부투쟁을 선동하였다(5.31, 중통). 국내 정치권의 '중북논쟁'과 관련하여 북한은 '색깔론' 등으로 비난하였다(6.6, 중통). 북한은 '6·15공동선언' 12주년을 맞아 기념대회(6.15) 개최하고 우리 측을 비난하고 선동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6.15, 중통).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우리 언론사의 언론보도에 대해 비난하였다(6.18, 중통).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여당의 '북한인권법' 국회 제출(6.3)을 비난하였다(6.18, 중통). 북한은 탈북 후 재 입북하였다는 박정숙과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를 보도하였다(6.28, 중통·중방·평방). 북한은 3·24 무단 방북한 노수희 범민련 남측 부의장의 7.5 판문점 귀환을 보도하는 한편, 노수희 구속과 관련하여 '조평통', '범민련' 등을 내세워 우리 정부를 비난하였다(7.3, 7.6, 중통·7.5, 중방). 탈북자와 관련하여 북한은 조선 적십자회중앙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며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다(7.5, 중통). '범민련', '6·15북측위' 등 대남외곽단체를 내세워 북한은 무단 방북 후 귀환한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의 구속을 비난하였다(7.7, 7.10, 7.12, 중통). 조평통 대변인 성명과 탈북자 '전영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미국이 동상과 기념비를 파괴하는 특대형 도발행위를 시도했다고 비난하였다(7.16, 중통, 7.19, 중통·중방·평방). 조평통 서기국은 이상득 의원 및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였다(7.21, 중통·중방). 북한 중앙통신은 논평

을 통해 통일부 대변인의 ‘탈북자 전영철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에 대해 “또 하나의 추악한 모략행위”라고 비난하였다(7.21, 중통·중방).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의 “북한의 정책변화” 및 “북한의 개혁·개방” 발언을 비판하였다(7.29, 중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북한은 박정숙·전영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비난·위협하였다(7.31, 중통). 8월 9일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은 우리 측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적십자실 무접촉 제안을 거절하고 비난하였다(8.10, 중통). 8월 30일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우리의 국가보안법 집행을 비난하였다(8.31, 노동신문).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한 인권의 달’ 선포식 개최를 비난하였다(9.6, 중통). 9월 12일 조선적십자회중앙위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의 수해지원 제의를 비난하였다(9.12, 중통). 9월 14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한은 우리 군의 정선교육을 비난하였다(9.14, 중통). 9월 20일 아태 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비난하였다(9.20, 중통). 10월 18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중북세력실체 표준교안” 배포를 비난하였다(10.18, 중통). 11월 24일 중통 보도를 통해 북한은 통일부 대변인의 금강산관광 관련 발표를 비난하고 관광 중단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11.24, 중통).

한편,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과 함께 백서, 고발장, 공개질문, 호소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였다. 첫째, 백서, 고발장과 공개질문이다. 조평통 서기국 백서를 발표(1.13)하여 북한은 기존 대남 비난을 종합하고 정리하였다.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월 1일 우리 당국에 대해 9개항에 달하는 공개질문장을 발표하였다(2.1, 2.2, 중통). 3월

14일 반핵평화위 백서를 통해 북한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비난하였다(3.14, 중통). 북한 조국통일연구원은 5월 10일 소위 ‘탈남자’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였다(5.10, 중통). 6월 11일 조평통 서기국 공개 질문장을 통해 북한은 정부·여당에 7개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중북논란’에 적극 개입하였다(6.11, 6.15, 중통). 7월 12일 조평통 서기국 진상고발장을 발표를 통해 북한은 현 정부 기간 대북정책을 비난하였다(7.12, 중통). 북한 조국통일연구원은 ‘전영철 기자회견’ 관련 진상공개장을 발표하여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주모자·가담자들을 처단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8.7, 중통).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10.26)을 통해 “박정희 군사독재 18년을 잊지 말고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동하였다.

둘째, 호소문이다. 7·4 남북공동선언 40주년을 계기로 북한은 조국전선을 통해 전체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7.4, 중통). 6·15선언 실천 남·북·해외 위원회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6·15, 10·4 선언 이행을 강조하였다(10.4, 중통).

셋째, 항의통지문이다. 북한은 관문점대표부 대표명의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2012년 을지훈련에 관한 항의통지문을 발송하였다(8.6, 중통).

2013년 북한의 대남 동향은 남한의 대북 정책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남한 신정부가 유연한 정책을 취하면 대남 비방을 중지하겠지만 반대일 경우 ‘맞대응 정책’에 따라 기존의 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 신정부가 북핵 폐기 및 금강산 관광객 피격·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사과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한이 유화적으로 접근한다면 대화에 응하는 등 기존 입장과는 다른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맹비난을 자제한 것은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전현준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Ⅲ

남북한관계 ●●●



1. 남북대화

2012년은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전무했던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채널 구축을 올해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한 발짝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간간히 나온 북측의 성명은 위협과 협박이 대부분이었다.

유일하게 남은 남북 간 대화채널은 남북 적십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적십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의하였으나(8.8) 북한적십자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구실로 우리 측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 적십자는 또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하여 북한에 수해복구 관련 10만 달러 지원을 발표하고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북측은 애초에 우리 정부의 제의에 수용의사를 통보하였으나 갑자기 지원 품목 및 수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원 거부를 통보하였고 이후에 남북 간 모든 대화채널은 중단된 상태이다.

2013년은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 간 대화채널이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미국에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12월 중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12.12) 2013년 초반의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신정부가 안정화되

는 5월 이후에는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조해왔고 한·미 간 대북정책이 어긋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측면 지원도 예상해볼 수 있다.

- 김동수 통일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 남북교류협력

가. 경제분야

2012년 경제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은 천안함 폭침('10.3.26)에 따른 5·24조치가 지속됨으로써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남북교역과 경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개성공단으로의 반·출입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역이 관련 통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북 간의 협력사업도 개성공단 진출과 관련된 것이었다. 2012년 11월 말 기준으로 남북교역액은 총 18.15억 달러로 2011년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반입은 9.8억 달러, 반출은 8.2억 달러였다.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반입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987
반출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28
계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815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13.1.2.

* 2012년 자료는 1월부터 11월까지 반영됨.

경협사업의 승인과 관련 개성공단에서의 협력사업은 2012년에 총 4건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50만 달러 이하의 신고사업은 20건이 진행되었다. 한편, 개성공단 승인사업은 누적 통계로 보면 총 278개의 협력사업이 승인되었다.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현황

<단위: 건>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계	
경제	민간경협	10	4	6	9	1	19	-	-	49	
	개성 공단	승인	26	15	163	53	10	6	1	4	278
		신고	-	-	-	-	12	11	18	20	61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13.1.2.

* 2012년 자료는 1월부터 11월까지 반영됨.

남북 간 유일한 경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2012년 개성공단 사업은 현상유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초에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건설된 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개시(1.26)하였다.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는 9월 말 기준으로 123개 업체로 생산액은 총 3억 5,467만 달러였다.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개, 만 달러>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가동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3	123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35,467	186,116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12.12.6.

* 2012년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 반영됨.

개성공단 근로자는 2012년 9월 말 현재 북측 49,866명, 남측 776명으로 총 50,642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1년보다 북측 근로자는 늘어난 반면, 남측 근로자는 약간 줄어든 상황이며 북측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북측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181
남측 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04	776	780
합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50,642	53,961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12.12.6.

* 2012년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 반영됨.

정부는 5·24조치('10.5.24)와 금강산 관광중단('08.7.12)으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의 교역 및 경협기업들에 대해 특별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으며, 2012년에도 9월에 개최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75억 원을 배정하여 기업별로 교역·투자 실적에 따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긴급운영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2013년의 남북경협 전망은 2012년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 가동과 중국의 5세대 지도부 등장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는 남한과 북한 간 관계의 안정화를 촉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 경제교류협력도 다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중 및 북·러 경제관계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중국 및 러시아 기업의 대북 진출에 참여하는 간접적 형태의 남북 경제관계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서도 김정은 체제의 2차년도 경제정책이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한과도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한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 내에서는 남한과의 경제교류협력 확대보다는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통해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한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북한의 변화가 담보된 형태의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2013년의 전반기에는 북한이 대남정책에 있어서 남한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 하에 다양한 차원의 전술적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한 신정부의 제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를 둘러싼 남북 협상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경색되어있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 간 불신구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전반기에는 대폭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확대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3년의 하반기에는 남북 경제관계의 확대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둘러싸고 남북 간에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남한 내의 대북 경협 추진주체가 대폭 감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한과 북한 간 경협사업이 전폭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경협관련 다양한 제의와 협상을

반복하는 양태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규륜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2012년 남북 사회문화교류 역시 전년도에 이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의 경우 전반기와 달리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일정정도 재개됨으로써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특히, 10월부터 대북 지원 민간단체나 종교단체들의 방북이 시작되어 11월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은 2011년 말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 등장이라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으로 민간단체의 방북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진 대북수해지원 이후 기존 입장에 부분적 변화를 보였다. 월드비전이 개성을 방문해 수해지원용으로 밀가루 500톤을 전달했으며(9.21),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개성을 찾아 각각 밀가루 500톤과 의약품 및 의류를 지원했다(10.5, 10.25). 이 같은 움직임은 11월 들어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남북함께살기운동(11.1), 월드비전(11.12), 어린이어깨동무(11.14), 경남통일농업협력회(11.15) 등 대북지원 관련 방북이 이어졌다.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경우도 같은 양상을 보여 상반기 2월에 정명훈 감독의 방북에 그쳤으나 하반기 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최근 평양 방문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평양에 대한 방북을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실제로 북한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2월 말)과 김인규 KBS 사장 겸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회장(7월)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평양 방북을 허용했다.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지휘자인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방북(2.28~3.1)이 성사되었다. 정명훈 감독은 3월 14일로 예정된 파리 합동공연 준비 차 평양을 방문, 북한의 은하수 교향악단과 리허설을 했다. 정명훈 감독 부부와 예술감독보좌역 등 3명이 베이징을 경유해 방북했으며 북한 은하수관현악단과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합동공연이 정명훈 감독의 지휘로 파리에서 성사되었다(3.14). 북한의 20대 젊은 이들로 구성된 은하수관현악단은 파리 개선문 인근 ‘살 플레엘’ 공연장에서 단독 공연에 이어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를 가졌다. 은하수 관현악단의 단독 공연으로 펼쳐진 1부 행사에서는 해금과 가야금 등 전통악기를 곁들인 북한 음악과 생상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 4곡이 연주되었다. 2부에서 은하수 관현악단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브람스 교향곡 1번과 아리랑을 합동 공연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김인규 회장이 방북(7.24~26)하여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과 북한 중앙방송위원회(KRT)간 런던올림픽 방송 중계권을 협의했다. 김인규 회장, 존 바튼 스포츠국장을 포함한 ABU 대표단 4명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중앙방송위원회 측과 런던 올림픽 중계권을 놓고 협상, 북한 주민들의 런던올림픽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중계권·방송제작·송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받고 방송중계 권료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한 분야는 종교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상반기 전반적인 남북교류의 위축상황에서 종교분야 역시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하반기의 경우 활발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3월의 경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도련맹과 중국 심양서 실무 협의(3.20~21)를 진행했다. 심양에서 열린 실무 협의에서 남북 공동기도회, 부활절 남북교회 공동 기도문,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에 북측 대표 참석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북한은 남북 공동기도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남한이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작성하면 확인 후 수정하기로 했다고 NCCK가 밝혔다. 아울러 10월 평양에서 남북 공동예배를 갖기로 합의하고 2013년 부산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에 북측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북 종교교류는 하반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불교계의 교류협력이 많았다. 지홍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관계자 4명이 개성에서 북한 불교 관계자와 만나 금강산 신계사 복원 5주년기념 공동법회 논의 및 대북 수해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육로로 방북(10.5)했다. 신계사는 신라 법흥왕 6년(519년)에 보운스님이 창건한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로 한국전쟁 중 소실됐으며 조계종과 북한 불교계(조선불교도련맹)가 2007년 10월 13일 공동 복원했다. 이 같은 논의의 결과 금강산 신계사 복원 5돌 기념 ‘남북불교도합동법회’가 개최되었다(10.13). 조계종 지홍 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등 19명이 방북했으며 이는 2012년 방북을 통해 열린 첫 남북공동행사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북한 측에서는 조불련 중앙위원회 고위 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 중앙위원회와 실무회담을 열고 중장기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10.16~17). 양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적절한 시기에 평양 지역의 불교 유적을 발굴·복원하고 인근에 의료·보건복지시설을 포함한 불교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같은 장소인 선양에서 원불교도 조불련 측과의 회동을 통해 금강산 성지 순례와 합동 법회, 개성 원불교 교단 복원, 금강산 수의단회의 개최 등을 협의했다(10.17~18). 11월 15일에는 개성 영통사 낙성 7주년 및 의천 다례재 합동법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유명준 상임공동대표 등 6명이 방북(개성)하여 북한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측과 음력 개천절(11.16) 천제 봉행 및 대북 수해지원 문제를 논의했다(11.8).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의 고시형 집행위원장 등 4명 방북(개성)하여 북한 조선천도교청우당 관계자들과 남북 공동 시일(侍日, 천도교 의식) 개최를 협의했다(11.9). ‘평화 3000’관계자 9명이 방북하여(11.17~21) 남북합동미사를 했으며, 콩우유 공장을 점검했다. 또한, 함세웅 이사장을 비롯한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관계자 10명은 안 의사 의거 103주년 공동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10.13~17).

2012년 북한이 남한 당국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당국 간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이 민간차원의 방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권력승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며 여전히 남한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 대선후보 모두 집권 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화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 여부 등 체제내적 요인과 남한 신정부의 성향 및 대북정책 기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모두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문제의 해법, 그리고 북핵·미사일 문제의 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경색 및 대화단절 국면의 지속에 대한 피로감을 남북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준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조한범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가. 북한인권 문제

북한 당국은 제4차 당대표자회의와(4.1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4.13)를 통해 김정은 체제하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공안계통의 인물을 전면에 포진시켰다. 13년 만에 전국 분주소장 회의(11.23)를 개최하는 등 공안 통치를 강화하는 한편, 1118 상무, 1111 상무, 1110 그루빠, 108 그루빠, 109 상무 등 여러 기관을 동원하여 손전화(휴대전화)와 얼음(마약의 일종), 녹화물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고, 외부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지속하였다. 정치범수용소와 관련하여 회령 22호 관리소가 폐쇄되었으며 북창 18호 관리소는 개천 지역으로 축소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자 규모도 8만~12만 명 규모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제4차 당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통한 권력승계 과정에서 인민적 시책을 강조하고, 4·15 열병식과 4·6 노작, 그리고 4·27 노작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강조하였으며, 2011년 11월과 12월 김정일의 사망을 전후한 14개 대외경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외자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다. 취약계층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의 어머니날(11.16) 제정,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9.25)에서의 교육제도 개편, 사상 최초의 장애인올림픽 참가(8.30)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대외 선전을 강화하였다.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18대 국회에

서는 결국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였다. 19대 국회가 들어서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6.1), 황진하 의원(6.15), 이인제 의원(8.20), 조명철 의원(9.5)이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인도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의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을 대표 발의(11.15)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지속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3.22)와 총회(12.20)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무투표로 통과시켰다.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1년간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2.23). 유럽의회의 북한인권 위반행위 중단 요구 결의안 채택(5.24),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5.29), 대외정책에의 인권 연계 조치 채택(6.24) 등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도 있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재승인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주요국가와 시민단체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및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속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탄압국으로 분류하였고,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프리덤하우스 등의 국제인권단체들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인권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는 ‘Hidden Gulag (감춰진 수용소) 제2판, ‘Seongbun(성분)’ 등의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제연대 활동을 통한 북한의 반인도적범죄 종식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영국과 프

랑스, 태국 등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대표부에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들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공개편지를 김정은에게 전달하였고(1.8~9), 서울에서 제2차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정치범수용소 수감 가족 증언, 북한반인도적범죄 해결을 위한 유엔 인권메커니즘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4.3). 또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유엔 조사위원회를 언급하는 등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립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 반인륜범죄 종식 국제활동가연대’는 스페인 국가법원에 김정은의 반인도범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4.13).

북한은 2013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金正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주민통제 및 사회통제와 외부정보 유입 차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인민생활 향상 및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선군정치를 지속하는 한 본질적으로 인민생활 향상 시책의 효과가 주민들의 인권 신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 인권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천명한 점에 비추어 2013년에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지원의 연계문제가 주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관련 법안 4개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우선 여당 내에서 법안 조문에 대한 조율과 통합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2013년에도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연례인권보고서 채택, 그리고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프리덤하우스 등 국제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채택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반 인도범죄 종식을 위한 활동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폐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규창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나. 대북지원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가운데 5·24 조치가 유지되면서 2012년도 대북지원은 이러한 2가지 요인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통일부는 2012년 업무보고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대상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수약품, 기초의료장비 등 보건의료 지원, 영양개선 사업 중심으로 대북지원을 제공한다는 세부 방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013년도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총 6,429억 원을 책정하였다. 그 가운데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은 200억 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270억 원이 책정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2012년 대북지원 예산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국한되어

극히 일부만 집행되었다. 정부는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를 통해 23.4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남북 당국 간 직접 지원과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단체 자체적으로 모금한 재원을 활용한 대북지원도 5·24 조치의 영향을 받아 취약계층과 지역, 인도적 성격의 물품을 중심으로 물자 반출이 허용되었다. 민간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제공된 대북지원은 12월 현재 16개 단체, 106억 원 상당으로 집계되고 있다. 밀가루 지원을 포함하여 분유, 영양빵, 의약품, 의류 등 인도적 물품을 중심으로 대북 지원이 제공되었다.

2013년도에도 북한이 심각한 수해 피해를 당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수해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북한의 수해를 계기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제의(9.3)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로 우리 대한적십자가 총재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통보(9.10)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밀가루 1만 톤과 라면 300만 개, 의약품·기타 물품 등 100억 상당의 지원을 제의(9.11)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지원은 필요없다”고 거부 의사를 표명(9.10)하면서 정부 차원의 수해지원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만, 우리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수해 지원은 제공되었다. 한편, 북민협을 비롯하여 개별 민간단체들이 밀가루와 기초의약품 등 긴급구호성 물품을 수행지역에 제공하였다.

2013년도 대북지원은 북한이 광명성3호 발사를 강행(4.13)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2·29 합의에 따라 북한에 영양지원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을 계기로 영양지원을 중단하였다.

2012년도에 대북 식량차관에 대해 최초로 상환기간이 도래하였다. 2000년부터 식량지원 차관 형태로 제공한 금액은 총 7억 2,000만 달러(약 8,260억 원)이며 조건은 10년 거치 후 20년 분할상환에 이자율은 1%이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5월 4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6월 7일 대북 식량차관의 첫 번째 원리금 상환기일이 다가온다”고 통지하였다. 이는 2000년 제공한 차관 8,800만 달러에 대한 첫 번째 상환 분으로 이 때 상환기일을 통지한 원리금은 583만 달러였다.

2012년도 대북지원 문제는 입법을 통해 논의되었다.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대북지원 조항이 포함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 황진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분배투명성, 모니터링 등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에서도 심재권 의원이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 정창래 의원이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발의하였다. 새누리당의 법안과 달리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은 인도적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혜대상으로 영유아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정하는 가운데 대북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북지원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북지원 추진체제는 예전과 다르게 새롭게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북지원 제공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북지원 집행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북지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원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설득력 있는 통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규모, 지원지역과 지원 대상을 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어낸 수준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분배투명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전과 다르게 대북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남한의 요구에 대해 북한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중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개별협력 논의도 활성화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 분야와 보건 의료분야의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 간 협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적으로 효율적인 대북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다만 대북지원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지원효과 중심의 접근과 적극적 지원 제공의 접근 등 접근 시각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2012년 12월 기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남성 402명, 여성 1,107명(72%)으로 총 1,509명을 기록하였다. 여성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현상은 전해와 동일하였으나 총 인원수는 2,706명을 기록했던 전해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 탈북자 수의 전반적 감소는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체제의 강력한 사회통제 및 국경통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탈북현상의 전반적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족 혹은 중개인의 도움을 받거나 동남아 국가를 경유하는 현상 등 최근의 탈북 추세는 지속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탈북여성들에 대한 인권 착취, 강제결혼, 인신매매 등의 사안들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체제가 취하고 있는 정권의 조기 안정화 및 사회통제 체제 강화 정책으로 인해 탈북 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하였으며, 특히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 중국과 북한의 협조관계는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탈북자 체포조를 중국에 보내는 등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탈북자의 증가를 통한 사회적 이완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려 애쓰고 있으며 재입북한 박인숙, 전영철, 김광혁·고정남 씨 가족을 통하여 북한 체제 선전을 강화하였다.

김정은 체제 등장으로 인한 탈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한 해 한국사회 내 탈북자 이슈 제기는 성공적이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중국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북한의 반 인도범죄 규탄 및 중국의 탈북자 북송 금지 캠페인은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단식 등을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활발히 전개되었다. 지난 9월과 11월에는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으

며 국내외 시민단체들, 지식인들, 인권운동가들, 일반시민들 등 사이에서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과 탈북자 문제의 시급성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논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 내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여론 조사를 통해 강제송환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등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활발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탈북자 복송 반대 운동은 김정은 정권의 통제정책 강화,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정책 지속 등 날로 악화되는 탈북환경에 대한 국제적 반항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탈북자 문제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더불어 북한 인권상황의 반인도성을 드러내는 본질적 주제 중 하나로 파악된다.

2012년은 한국 사회 내 탈북자들의 위상이 높아진 한해로 기록된다. 4월 총선(4.11)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배정된 조명철 통일교육원장이 탈북자로는 최초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탈북자 출신 김유경 씨는 장편소설 ‘청춘연가’를 발간하여 탈북자들의 애환을 표현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도 다변화되어 통일부와 각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규직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2011년 7월 착공된 제2하나원이 완공(12.5)되어 개원식이 진행되었다. 한편, 제2하나원은 한번에 500명, 1년에 최대 5천 명의 탈북자들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고학력·전문직 탈북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가능한 시설이다.

2013년에는 올 한해 감소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김정은 체제가 당분간 정권의 안정을 위한 통제강

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므로 탈북자의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한 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제사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난민, 북한 민주화, 개발 이슈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총체적으로 제기한 바, 북한이탈주민 문제도 다양한 이슈들과의 연계 속에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탈북여성 및 탈북고아의 인권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1년 4월 미국에서 발의된 「탈북고아입양법안」이 지난 9월 미 하원(9.11)을 통과하였고, 이후 일부 수정된 「북한아동복지법안」이 상원에서의 가결(12.28)을 거쳐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향후 탈북아동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인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제2 하나원 출범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적응을 위한 보다 체계화된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전망되며 북한이탈주민 정규직 채용 및 정착지원사업 확대 등 전체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라. 이산가족문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2년 한해도 상봉을 비롯한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있어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태이다. 2010년 제18차(10.30~11.5) 상봉 이후 남북 이산가족 교류는 사실상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2010년 말 연평도 포격사건(11.23)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면서 이산가족 교류가 중단된 것이 그 원인이다.

올 한해에도 정부는 북한당국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를

수차례 제의했으며 지난 2월 14일에도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고 ‘조선중앙통신(2.24)’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북남공동선언들을 이행할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가 추석을 계기로 제의(8.8)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 대한 북측의 반응 역시 부정적이었다. 북한은 다음날 ‘조선적십자회’의 대남 통지문에서 ‘5·24 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상봉 실현의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우리 정부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였다(8.9). 이와 같은 북한의 부정적인 입장 및 대응은 올 한해에 걸쳐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의 논평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또한, 북한당국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새로운 유형의 이산가족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탈북자의 국내 입국과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우리 민족끼리(3.27)’의 논평을 통해 우리 측이 북한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에 끌고 가 우리 민족 안에 또 다른 류형의 흠어진 가족, 친척문제라는 것을 산생시켰다”라고 강변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권 및 인도주의사안인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다루려는 북한당국의 기본 입장 및 태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명박 정부(‘08~’12) 기간에는 2009년과 2010년에 단 두 차례의 대면상봉만이 성사되었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바, 올 한 해에는 9월말 현재 생사확인 6건, 교류지속 4건 등 총 10건에 불과하다.

상봉을 비롯한 이산가족 교류가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을 4년여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7.30)하였다. 이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수립된 3개년(’12~’15)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이산가족문제를 남북관계에서 최우선적 인도적 과제의 하나로 인정,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전면적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상봉정례화, 고령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상시상봉, 자유방문 등),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특별 대책 마련(DNA, 유언 등 이산가족 기록 보존 등), 정기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적·안정적 정책추진 기반 조성, 정책추진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확충 등을 기본방침으로 제시하였다.

세부 추진계획은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 정보관리, 당국차원 이산가족 교류 확대,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대책 등으로 세분화·구체화 되어있다. 또한, 추진 일정은 기반구축단계(’12), 제도화단계(’13), 근본적 해결단계 진입(’14~’15) 등으로 되어있다. 남북 분단의 고착화와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해결의 시급성,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 증대 등을 적극 고려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은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이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일정을 연도별로 나누어 보다 구체화·체계화하였는바, 정책성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에는 남북 당국 간 협의채널 구축,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이산가족면회소 정상화, 고령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고

항방문 시범추진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의 정상추진에 있어 관건은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의 기본 입장 및 태도의 변화이다. 2013년에도 북한당국이 남북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주의사안이 아닌 정치문제로 다루며 부정적·소극적인 입장 및 태도를 견지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북한은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임순희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부록: 2012년 주요 사건일지

남북정세 일지

- 1.2~4 북한, ‘조평통 서기국 상보’ 등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의 조치를 비난
- 1.5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강화를 공언
- 1.6 북한,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 미제침략군’이라는 제목의 중동 사설에서 “미국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
- 1.12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로 백서를 발표하여 △“MB정부가 남북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완전파국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주장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패당의 반통일 대결정책이 빚어낸 최대의 극악무도한 죄악”이라며 비난
- 1.17 북한은 ‘기회의 창’ 등 발언 관련 조평통 대변인 회견(1.19) 및 중통(1.17) 등을 통해 우리 대통령의 신년연설 및 통일부장관 신년사 내용 비난
- 1.18 북한, 통일연구원·조선일보 주최 세미나에서의 통일부장관 축사 비난
- 1.24 개성공단과 통일부 관계자, “북한의 설 연휴 직후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가 400명 정도 증원될 예정”이라고 발표
- 1.25 북한, 대규모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올해 예정된 한국과 미국의 각종 군사훈련계획을 ‘북침전쟁계획’이라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
- 1.25~29 북한, 국방위 대변인 성명(2.25), 외무성 대변인 담화(2.27),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2.29) 등을 통해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지속 비난
- 1.31 북한, 인천 평화킵 유소년 축구대회(1.31~2.3, 중국 쿤밍) 도중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며 일방적 불참을 통보
- 2.1 북한,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호소문을 채택
- 2.2 북한,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하나원장 직급 격상 등을 비난
- 2.2 북한, 2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우리 정부에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우리 측 조문 태도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며 △대북심리전 중지 △남북교류 재개 및 활성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호응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용의를 질의
- 2.4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쌍룡

-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 비난
- 2.6 북한, 통일부장관 민화협 조찬강연, 국회 상임위 보고 등 비난
- 2.8 통일부, 8일 '민족사랑나눔'이 신청한 아동용 의류·의약품 등 15억 원 상당의 대북 지원용 물자 반출을 승인
- 2.9 북한, 6·15남북위 접촉에 대한 우리정부의 수리거부 비난
- 2.10 외통위·남북관계 특위 의원, 개성공단 방문, 김충환·남경필·구상찬·김동철(외통위), 박주선·김성수·박선숙·이정현(특위) 의원 등
- 2.14 정부, 14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 북한, 이튿날 이와 관련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우리 정부당국을 비난(2.15)
- 2.19 북한, 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 전통문을 발송하여 △서해지역 해상 사격 훈련시 보복대응 위협 △북한군 서부지구사령부 명의 '공개통고장' 보도(중통, 2.19) △대응 타격 및 민간인 안전지대 대피해야 등 위협
- 우리 군, 예정대로 2.20 9시 30분부터 포 실사격 훈련 실시
- 2.22 북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비난
- 2.24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남측에 6·15, 10·4선언 이행의지 표명요구
- 2.27 국회,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
- 2.29 북한, 대남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지난 6·25때처럼 전쟁마당이 조선반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
- 3.2 북한,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 군부대 내무반에 부착된 구호를 '최고존엄'에 대한 중상모독행위라고 비난하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평통 대변인 담화, 규탄 군중대회, 국방위 기자회견 등을 진행
- 3.6 북한, '민족21' 대표에 대한 간첩활동 수사 관련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정부 비난
- 3.13 육군 제1사단, 파주일대에서 지상협동훈련 실시(3.13~15)
- 3.14 정명훈, 14일 파리에서 북한은하수관현악단-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합동공연 지휘
- 북한, 반핵평화위 백서를 통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비난
- 3.16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실용위성' 발사계획 발표, '광명성3'호는 지구관측위성으로 4월 12~16일 사이에 발사 예정
- 3.2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북한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중국 심양서 실무협의(3.20~21)
- 3.26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국제적 망신을 부

- 르는 전쟁소동'이란 논평을 내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국제적인 반공화국 핵 공조”라 주장
- 북한, 이튿날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탈북자로 인해 새로운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
- 3.30 류우의 통일부장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 북한, 4.11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비난 지속
- 4.5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비난
- 4.6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정보특위 공화당 의원단을 접견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 논의
- 4.9 북한, 4.11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지속적 비난
- 4.10 정부,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움직임에 경고
- 4.13 정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
- 4.16 북한, UN 안보리 의장성명 전면 배격하는 외무성 성명을 채택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한 처사 전면 배격” △“자주적 우주이용권리 계속 행사” △“2·29 조·미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주장
- 4.18 북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복수를 천명하면서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 보낼 수도 있다”고 위협
- 4.23 북한,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를 통해 ‘최고존엄’ 모독행위에 대한 ‘특별행동’ 경고
- 5.3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주평화통일(민주평통)자문회의의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선군의 불맛을 톡톡히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
- 5.4 수출입은행,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북한 식량차관 원리금 상환기일(6.7) 통보
- 5.6 북한, 외무성 대변인 회견을 통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공동성명 배격 △우주 개발과 핵동력 공업 발전 추진 주장
- 5.10 북한, 조평통 대변인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비난
- 북한, 조국통일연구원을 통해 ‘탈남자’ 백서를 발표
- 5.14 북한, 조평통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한문제

- 논의 비난
- 5.18 북한, 채신성 대변인 회견, 우리 측의 ‘북한 전과교란’ 주장을 ‘새로운 모략·날조극’이라 비난하는 한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를 비난
- 5.22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통일항아리 행사 비난
- 5.24 북한, 5·24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10.3.26)로 실시한 5·24 조치 2주년을 맞아 “5·24조치의 최대 피해자는 남한의 기업인들”이라며 남한정부를 비난
- 5.31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비난하고 반정부투쟁을 선동
- 6.4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 발표하여 보수언론사 공격 위협 통일부 대변인, 이에 대해 “협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6.11 북한,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 발표하여 “정몽준·김민수 등 친북언행 공개할 수도 있다”고 주장
- 6.15 북한, 6·15공동선언 12주년 맞아 기념대회 개최하고 △우리 측 비난 △호소문 채택
- 6.18 북한,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언론사의 언론보도 태도와 정부여당의 ‘북한인권법’ 국회 제출을 비난
- 6.22 북한, 평화옹호전국민족위를 통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6.21~22), 한·미 해상훈련(6.23~25) 비난
- 6.28 북한, 탈북 후 재입북한 박정숙과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
- 6.29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29일 브리핑에서 “탈북후 재입북 인물은 2006년 입국한 박인숙씨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
- 7.4 북한,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0돌을 맞아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남북공동선언 관철 △주한미군철수 △‘이명박 역적 패당 규탄’ △‘중복세력척결 소동 짓부수자’ 등을 주장
- 7.5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탈북민 박인숙 재입북 관련 우리 정부 비난 △탈북자 귀환 호소
- 7.6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체포 관련 “남조선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폭압”이라 주장
- 7.12 북한, 조평통 서기국 명의의 진상고발장을 발표하고 현 정부 기간 대북정책을 비난
- 7.16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서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던 자들을 적발, 체포” 주장 △‘최고존엄 모독’에 보복위협
- 7.20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전영철 사진’ 관련 “특대형 음모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진상이 드러났다”고 주장
- 7.21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반정부 투쟁 선동

- 7.24 김인규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회장, 올림픽 중계 협의차 방북
- 7.29 북한, 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정부의 ‘개혁개방 발언’을 비난
- 7.30 통일부,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4~15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목표 △대화채널을 복원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등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
- 7.31 북한, 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를 거절
- 8.6 북한, 판문점대표부 대표명으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2012년 UFG 훈련에 관한 항의통지문을 발송
- 8.7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8·7 전영철 기자회견 관련 진상공개장을 발표하고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주모자·가담자들을 처단할 것”이라고 위협
- 8.9 북한, 조선적십자회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를 거절하고 비난
- 8.16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비난
- 8.19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등 대남단체를 통해 ‘UFG훈련’ 비난 합동성명 발표
- 8.27 남한,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 진통문을 발송하여 2009년 남북 간 합의대로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
-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의 을지훈련 비난
- 8.30 북한,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국가보안법 집행 비난
- 9.3 대한적십자사,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 9.6 북한, 조국통일평화위원회(조평통)를 통해 대북인권단체의 ‘북한인권의 달 선포식’ 비난
- 9.12 북한, 수해지원 관련 지원 품목 및 수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원 거부를 통보
- 9.20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비난
- 9.21 우리 군, NLL 침범한 북한 어선에 경고 사격
-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밀가루 500톤을 전달
- 9.26 북한, 최근 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어선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 사격과 관련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민간어선에 대한 사격은 북침을 위한 고의적 책동”이라 주장
- 9.27 북한,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 관련 “제2의 유신독재 부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
- 9.29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NLL은 미군이 일방 설정한 유령선, 북

- 방한계선 고수주장은 연평도불바다를 재현하겠다는 대결선언”이라고 주장
- 10.4 북한, 10·4 선언 5주년 계기 ‘호소문’을 발표하여 △6·15, 10·4선언 이행 촉구 △‘남북 각 계층 간 접촉·대화’ 등을 주장
- 10.5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수해지원용 밀가루 500톤을 육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
- 10.6 남측 초소와 불과 500m 거리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북한군 하전사 1명이 상관을 사살하고 귀순
- 10.10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비난·위협
- 10.12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적의 도발억제” 발언 비난
- 10.15 북한, 어선 1척 백령도 인근 NLL 월선, 우리 군의 경고통신 후 북귀
- 10.16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북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와 중국 선양에서 실무회담,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 추진 방안 협의
- 10.18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측의 “중복세력실체 표준교인” 배포 비난
- 10.19 북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 명의의 ‘공개통고장’을 통해 “빠라살포 지점은 그대로 둘 수 없는 도발 원점”이라고 위협
- 10.20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서해에는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10.24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남북관계 파국의 원인이 남측에 있다면서 ‘고발장’을 발표하고 보수정권의 재집권 시도를 비난
- 10.25 북한, 외무성 대변인 중통문답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발언관련, ‘9·19 공동성명 이행 의무를 미국은 하지 않고 북한에게만 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
- 10.27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한에 의약품 및 의류지원
- 10.27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한·미의 “북한 도발 대응태세”를 비난하며 남한과 미국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결탁’이라고 주장
- 11.2 북한,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을 통해 우리 측이 “북풍조작책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
- 11.8 북한,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을 통해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 통일 분야 공약(11.5 발표)에 대해 “전면대결공약, 전쟁공약”이라 주장
- 11.15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측 노동자 대상 대선개입 시도
- 11.16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대통령 및 새누리당의 “북한 대선개입” 발언이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있다며 비난
- 11.17 북한, 조평통 대변인 기자문답을 통해 우리 측의 연평도 포격 2주년

- 행사 관련 “연평도 참패를 만회하고 대결의식을 고취하여 보수정권을 연장하려는 발악”이라고 주장
- 11.22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대변인을 통해 우리정부의 ‘외국인 대상 금강산관광 중단 촉구’와 관련해 “엄중한 주권침해행위” 주장
- 11.25 북한, ‘제1회 서울안보대화(SDD, 11.14~16)’ 진행 관련 ‘대북정책을 합리화하고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대결 책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11.28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우리 측의 ‘북한 대선개입’ 지적을 비난하고 북한은 ‘6·15, 10·4 선언이행 등 남북관계 관련 입장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
- 12.1 북한,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을 통해 박근혜 후보에 ‘대북정책 기본입장’을 질문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되고 변화된 대북정책 공약을 표명’할 것을 요구
- 12.5 통일부, 제2 하나원 개원식 진행
- 12.6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정부가 UN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적대분위기를 조성하여 반공화국 국제공조를 실현해보려는 흉책”이라고 주장
- 12.8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의 진상공개장에서 “금강산관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
- 12.12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
- 12.14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동향과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비난
- 12.17 정부, 북한 발사 로켓의 추가 잔해를 찾는 작업을 사실상 종료하고 △14일 1단 추진체 잔해 인양 △국방과학연구소, 추진체 잔해 분석
- 12.19 북한, 한·미양국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실시(12.6~7) 관련 “대북 핵선제공격 기도를 드러낸 도발행위, 지역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끌어가는 범죄행위” 주장
- 12.20 북한, 내외신 보도를 인용해 ‘남한 대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로 당선되었다’고 간략 보도
- 12.21 정부, 『2012 국방백서』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규정
- 북한, 조선신보를 통해 향후 대북정책추진방향과 관련 박근혜 당선자의 대답을 요구
- 12.23 북한, 최전방 애기봉 등탑 점등 점등 관련 “국방부의 종교단체 요청 구실은 내외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며 “북남관계를

- 더욱 악화시키려는 이○○역적패당의 반공화국 심리전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 12.28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17호를 통해 국방부의 ‘2012국방백서’ 발간을 “대결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최후의 발악”이라 비난
- 12.31 북한, ‘이명박 대통령의 전방부대 방문과 안보태세 강조’와 관련하여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극단적인 적대관계에 계속 못박아놓기 위한 고의적 책동”이라고 주장

동북아정세 일지

- 1.1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에 축전
주 네팔 북한대사, 네팔 정당지도자들·주재국 노동자농민당위원장 면담
- 1.4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의 장 즈쥘, 추이토펬카이 부부장과 면담
- 1.5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3차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등 후속 대화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위해 서울서 김성환 외교 통상부 장관과 면담
- 1.8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UN 산하에 북한의 반인도범죄 조사위 설립 촉구 기자회견
- 1.9 나카이 히로시 전 일본 납치문제담당장, 중국 동북지방에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이끄는 북측 대표단을 만나 납치문제 논의를 위해 비밀회동
- 1.9~11 일본정부,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어민 3명을 신속하게 송환
이명박 대통령,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사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정상회담)
- 1.11 북한, 11일 오전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백두산 부근에 중국과의 경제합작구 건설 추진
- 1.12 중국·아세안, 남중국해 논의 고위급회담 개최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키야마 국장, 서울에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면담
- 1.13 한·미·일 국회의원, 도쿄에서 제1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체제 변화와 북·중 관계 등에 대해 논의
- 1.16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인권정보 입수차 방일
로버트 아이언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와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당국자 등과 대이란 제재 논의차 방한
- 1.18 류전민 중국 외교부 차관보와 S. 자이산카르 주 중국 인도대사, 중국

- 과 인도 간 국경분쟁 실무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합의
- 1.19 워싱턴에서 한·미·일 3자 협의 논의
일본정부, 인도서 일본군 유골 수집 재개
- 1.24~25 북한, 지난해 마약과 화폐위조로 구속한 일본인 2명 석방
티베트 유혈시위 △2명 사망 △중국의 충격대응확인
미·일 연합훈련(아마시쿠라훈련) 개최
- 1.25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 철회를 촉구
- 1.28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일본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과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을 체결
- 1.30 중국, 북한에 식량 50만 톤 및 원유 지원
한국, 미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 표준시행약정 체결
중국 외교부, 일본의 다오위다오 부근섬 '작명'에 항의
- 2.2~4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과 접촉
- 2.5 미·일, 오키나와 해병 괄 이전·후텐마 분리 합의
- 2.7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미국의 카운터파트인 조 바이든 부통령과
방미에 앞서 전화 통화로 양자관계를 논의
- 2.8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
고리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러시아 외교부 영빈관에서
회담
미·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분리하여 오키나
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괄 이전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
- 2.9 '2012년 국제정세 주요 위험요소 전망' 세미나 뉴욕서 개최
성김 주한미국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면담하고 평택 주한미군 기
지를 비롯한 경기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
- 2.9~11 제3차 한·미 군사기술보안회의(DTSCM)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
- 2.11~24 미·일·호, 괄 미군기지서 합동 공군 훈련
- 2.13 다이빙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 협의
△시리아 문제관련 문제를 논의
북한 경제 대표단, 러시아어 극동 아무르주를 방문해 주 정부 인사들
과 양측의 경제협력 구체 방안을 협의
- 2.14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도쿄 미쓰비시 본사에서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근로정신대 할
머니들의 배상문제 협의
- 2.15 중국, 북한의 라선특구 내 4-6호 항구 건설과 사용권 확보
- 2.14~17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방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
부 수뇌와 회담
주·러 북한대사관,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상하원의원 참

- 석하는 연회 개최
- 2.17 일본 조총련 간부 등 120명 방북
- 2.20~24 서해서 한·미 연합대잠훈련 실시
푸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 2.21 한미 FTA 3월15일 0시 발효 발표
조현동 외교부 북핵단장, 북·미회담 조율차 방중
북한 철도전문가 33명, 러시아철도전문 기관에 연수
- 2.22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제재 조정관,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문제협의를 위해 워싱턴 D.C.에서 회동
- 2.23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일본
측 대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베이징에
서 면담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상
황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
- 2.23~24 북·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5차 회의가 중국 베이징서 개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 등
북한 대표단과 만나 베이징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대화 재개
- 2.27 한·미연합 키리졸브훈련(~3.9)
푸틴 러시아 대선후보, 언론기고문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의 견고성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 2.29 미국과 북한, 북경에서 가진 3차 회담 결과를 발표(2·29합의)
- 3.1~2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방한, 수교 20주년 계기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
계 내실화 논의
- 3.5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
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발표
한·중·일 고위급회의 개최
- 3.7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미FTA 이행 포고문 발표
김수권 외교부 평화단장, 탈북자 문제 논의차 방중
- 3.7~8 미·북, 베이징에서 대북 식량지원 회담 개최
- 3.10 김창광 1부사장이 이끄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 미국 뉴욕에
서 진행되는 공동 사진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미
북한, 미국에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정부, 외교통상부를 통해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중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
- 3.12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탈북자 문제가 공론화를 위해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
- 3.13 유엔 감시 민간단체인 ‘유엔워치’를 비롯한 20여 개 민간 인권단체,
제4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내 탈북

- 자의 강제복송과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 논의
이명박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당선
을 축하
- 3.14 일본 시마네현, 도쿄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개
최, 독도 주변 섬에 자위대 주둔을 요청
일본, 대지진 추도식서 ‘대만을 민간단체 취급’ 논란
중국 상무부, “환경보호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 발표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모스크바에서 테니스프 외교부 제1차관과
회담
- 3.15 일본, 북한과 ‘복송 일본인 처’ 귀국 협의
한·러 제1차 국방전략대화 러시아에서 개최
- 3.16 북한, ‘위성 발사’ 발표
- 3.16~17 러시아 외무부, 북한 로켓 발사 계획에 우려표명
미국, 북한의 로켓발사 시 식량지원 거부 의사 표명
반기문 UN사무총장, 북한 로켓발사 계획 취소 촉구
일본, 북한 발사 위성이 일본을 향할 시 요격 검토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 기자회견(3.17)
- 3.18 유럽연합, ‘광명성3호’ 발사 발표에 우려표명
리용호 북한 6자회담 대표 방중
- 3.19 북한, ITU에 광명성3호 발사계획 신고
리용호 북한 6자회담 대표, IAEA에 사찰단 파견 요청
- 3.22 유엔인권이사회,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 무투표 통과
- 3.24 미국, 북한 로켓 저지 위해 중·러에 협조 요청
- 3.25~26 핵안보정상회의 서울서 개최
- 3.26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미·중 정상, 핵안보정상회의서 북한 로켓발사 집중 논의
- 3.28 북한, ‘광명성3호’발사 관련 기자회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
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가결 처리
- 4.1~3 중국 하이난에서 보아오포럼 개최
- 4.3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일본, 대북 수출입 금지 제재 1년 연장
북한반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ICNK 정치범수용소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
- 4.6 일본, 외교청서 발표
정부,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
장을 담은 외교청서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
러시아, 신임 주북한주재 러시아대사에 티모닌 특명대사 임명

- 4.7 중국·일본 재무, IMF 추가출연 공조 합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 4.10 일본·영국 총리, 무기 공동개발 합의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미국 해군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북한 미사
일발사 우려 △동북아에서 미군과 동맹의 역할 강조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김정은에 축전
- 4.12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제1비서 추대 관련 축전 발송
- 4.13 북한 김계관, 이른 시일 내에 만남을 요청하는 서신을 미국에 발송
미·일 당국,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확인
일본, 긴급 안전보장회의 소집
미국, 로켓 발사로 대북식량지원 중단 발표
안보리, 북한로켓발사 개탄, 대응조치 논의
미·중 외교장관, 전화로 북한 로켓 대책 논의
북한 반인륜범죄 종식 국제활동가연대, 스페인 국가법원에 김정은의
반인도범죄 고발장 제출
- 4.14 미국, 북한 핵실험 대비 정찰기를 오키나와에 배치할 것을 발표
- 4.15 김성환 외교장관, 중국 외교부장과 북한 로켓 관련 전화 회담
중·일 외교부장, 북한 로켓발사 대책 협의
미·중, 북한의 로켓발사 강력 비난하는 의장성명안 합의
- 4.16 안보리, 북한 로켓 강력 규탄 의장성명 채택
일본 참의원, ‘북한 미사일 발사는 폭거’ 결의안 채택
이시하라 도쿄도지사, 센카쿠 매입 공식발언
- 4.17 북한, 외무성을 통해 미사일발사관련 안보리 결의 비난 성명
중국,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에 동의
- 4.19 인도, 중국 도달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 4.20 북한, 3차 핵실험 실시 준비 완료
사이트 일본 관방 부장관, 노다 일본 총리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친서를 청와대에 전달
- 4.20~24 북한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비서가 이끄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 방
중 전략회의 및 후진타오와 담화
- 4.21 북한 노동당-중국 공산당, 베이징서 전략대화 개최
- 4.24 필리핀-미국, 남중국해 섬에서 합동군사 훈련
- 4.27 미·일, 오키나와 주둔 미국 해병 9천 명 팜 등 해외이전에 합의하고
공동문서로 발표
한·러, 모스크바에서 제4차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 4.28 한·미, 북핵위협 시나리오 공동 연구개발에 합의
북한, 일본 자민당 총재 등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비난
유엔, 중국·일본 대륙붕 마찰 오키노토리 섬으로 인정
일본, 아세안+6개국 FTA 협상에 참여
- 4.30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워싱턴에서 정상

- 회담을 열고 동적방위협력 합의
- 5.1 일본, 히로키 시게유키 뉴욕총영사 등을 미국 팻팍에 보내 거액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안부 기림비의 철거 요구
- 5.2 중국, 유엔 북한 추가제재로 3개 단계 자산동결에 동의
- 5.5 한·중,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5.6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상하이서 개최
- 5.6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방문
- 5.7~18 한·미, 역대 최대 규모 연합 공중훈련 실시
- 5.8 북한, 중국어선 나포
- 5.9 북한 박의춘 외무상, 비동맹국가회의의 참가 위해 이집트 방문
-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 G8 정상회의 불참, 메드베데프 대리 참석
- 중국 원자바오,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에 축전
- 5.10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방문
- 북·중, '만포-지안 국경다리' 공동건설 조인
- 5.11 미군, 신형 요격미사일 실험 성공
- 필리핀-중국, 마닐라에서 남중국해 스브러 섬 대치 사태 협의
- 5.12 러시아 사할린주, 쿠릴열도 인프라 정비와 농업생산에 한국과 중국기업 참여 발표
- 5.13 한·중·일, 베이징서 정상회의 개최
- 한·중, 정상회담 개최
- 5.14 한·중, 북경에서 FTA 1차협상 개시를 위한 행정사항 논의
- 5.16 미국 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가결
- 제1차 한·미 FTA 공동위 워싱턴에서 개최
- 중·일, 중국 항저우에서 첫 실무급 해양 협의 개최
- 5.17 일본 민주당의 나카이 히로시 중의원 예산위원장,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와 중국에서 유골 반환문제 논의
- 중국, 오키나와 부근 해역서 무인기 훈련 실시
- 일·호 정보보호협정 체결
- 5.21 한·미·일 6자대표, 서울서 북핵문제 협의
- 5.22 북한 외무성 대변인, G8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맹비난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푸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베이징서 회담
- 5.23 한·미,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미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운영 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AR)에 합의
- 5.23~25 왕즈전 중국 정형 부주석 방한
- 5.24 유럽의회, 북한인권 위반행위 중단요구 결의안 채택
- 5.28 김정은, 러시아 여당 의장에 선출된 메드베데프에 축전
- 5.25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과 북한의 나선, 러시아 하산을

- 있는 '3국 무비자 관광' 시작
- 5.29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
- 5.30 겐바 일본 외무상, 러시아 쿠릴열도 개발에 대해 러시아와 한국 측에 유감입장 전달
- 북·중,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착공
- 6.1~3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 싱가포르 개최
- 6.5 러·중, 전면적·전략적 협력 공동성명 채택, 국경경비 군사력 감축에 합의
- 6.6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마르굴로프 아태담당 차관, 모스크바를 방문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
- 6.7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50여개국 및 UN의 외교·안보담당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고위급 안보회의(6.7~8)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하여 △글로벌 에너지안보 강화 △해적 퇴치 △국제정보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해 논의
- 6.8 북한 노동당 대표단, 라오스 방문
- 6.12 김정은, 러시아 국경절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축전
- 6.14 김관진 국방장관,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MD 통합운용체계 구축에 합의
- 6.17~19 쑨정차이 중국 길림성 당서기,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방한
- 6.18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북한에 대한 제재 1년 연장
- 미국 하원, '중국인 배제법' 사과 결의안 승인
- 멕시코에서 열린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 영토문제 교섭 재개 합의
- 6.19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멕시코에서 정상회담
-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멕시코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문제 및 남중국해 영토 분쟁 협력 협의
- 6.20 미국 상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법 개정안 통과
- 6.21~22 한·미·일, 제주 남방서 연합해상훈련 돌입
- 브라질에서 '리우+20' 정상회의 개막
- 6.23~25 한·미 연합해상기동훈련 실시
- 6.24 유럽의회, 대외정책에 인권문제를 연계 조치 채택
- 6.25 일본, 미국과 F-35기 대당 1천 400억 원에 도입 합의
- 로그비노프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 방한, 북한문제 조율
- 6.26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러시아 6자 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 리 로그비노프 북핵담당 대사와 북핵문제 논의

- 6.27 한·중 어업협력회의 베이징에서 개최, 어업협약체 출범
공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 러시아 외무차관과 6자회담 재개방안 등
논의 차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
- 왕치산 중국 부총리 방한(6.27~29)
- 7.2~6 제8차 한·중 군수협력회의 베이징에서 개최
- 7.3~5 한·중, FTA 2차 협상 제주시 개최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항공기로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섬을 방문
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 홋카이도 지토세시 항공자위대 기지 등지
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공동 훈련
- 7.5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대
사과 만나 모스크바에서 국경조약에 서명
- 7.9 북·중, 우호협력협약 체결 51주년 기념연회 개최
대만, 중국 공격에 대비 미사일 발사훈련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러시아 수해와 관련 푸틴 러
시아 대통령에 위로
- 7.10 아세안 연례장관회의 프놈펜서 공식개막
- 7.11 박의춘 북한 외무상, ARF서 7개국과 양자회담
- 7.12 멩젠주 중국 공안부장 방한(~14), 아세안지역안보포럼
- 7.15~22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독일 외교부 정무차관보,
영국 외교부 아태담당 국무상과 회담, 북핵문제 협의
- 7.16 반기문총장, 중국 방문, 후진타오 면담
- 7.16~20 이란, 베트남, 태국 외무성대표단 방북
- 7.17 토머스 보스틱 미국 육군 공병사령관 방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협의
일본, 내년부터 미국 국방부에 자위관을 파견하기로 미국정부와 합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코피 아난 유
엔 및 아랍연맹(AL) 시리아 공동 특사와 회담
- 7.18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베트남 외교부 대표단 담화
- 7.19 한·러, 서울에서 제12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
한·러,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러 에너지협력 포럼 개최
- 7.20 미국 국토안전부, 입국신고서(I-94)에 대만 국적표기 허용
- 7.24~25 리명수 북한 인민보안부장,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저우융캉 중국공
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면담
한·러, 러시아 올란우데에서 제8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개최(7.24)
- 한·러, 제3차 한·러 비즈니스 포럼(7.25) 개최
- 7.28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 러시아 소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 7.30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과 회담
- 7.31~8.2 UN 조사단, 북한 홍수 피해 관련 방북
한·중, 베이징에서 제2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여 군수지원MOU 논의
북·미, 싱가포르서 3일간 비공식 접촉
- 8.6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베트남 주석과 협력확대 방안 협의
- 8.9 북한, 중국기업과 북한 내 광산 3곳 합작개발 계약
- 8.9~10 북·일, 적십자회담 개최(8.9~10)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8.10)
- 8.15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왕 사죄'발언
- 8.14 북·중, '황금평·나선 관리위' 출범에 합의
- 8.17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베이징서 경제협력 논의 차 왕 자루이 면담
북한, 미국에 '9·19공동성명' 파기 위협
북한 장성택, 후진타오·원자바오 면담
노다 일본 총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유감서한 전달
- 8.18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서명
- 8.21 일본 외무성, 한국정부에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외교서한 전달
- 8.23 노다 일본 총리,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발언을 정면 비판
정부, 일본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고 다음날 노다 총리의 특별기자회견 내용 반박
- 8.24 일본 중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사과요구 발언에 대한 항의 결의안 채택(참의원은 29일 채택)
노다 일본 총리, 특별기자회견에서 독도영유권 주장
- 8.27 일본 민간인 4명, 유골수습 위해 방북
- 8.28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비동맹회의 참석차 이란 방문
- 8.29 북·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인 유골 반환 협의를 위한 정부 간 대화를 재개
- 8.30 왕자루이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 김정은 면담
- 8.31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몽골·캄보디아 정상들과 회동
일본 아사히신문, 사설을 통해 고노담화 부정 일본정치인 비판
일본 측의 요청으로 한·일 양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만나 현안을 논의
- 9.2~5 천즈리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방한
- 9.5~6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담
- 9.7 중·러 정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

- 로 별도회담 개최
 한·일 양국 외교장관, 양국 현안의 ‘조기 진정’을 위해 상호 냉정히
 대응해 나갈 것을 합의
- 9.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개막(러시아 블라디보스
 토크)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비공식회담 및 푸틴 러시
 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 9.9 한·일 정상,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합의
- 9.15 중국 50여 개 도시에서 있었던 센카쿠(중국어명: 다오위다오) 국유화에
 항의하는 반일 시위에 최대 8만 명이 참가
- 9.17 북·러, 옛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빚을 탕감하는 채무조정에
 관한 협정을 모스크바에서 체결
 미·중 해군, 아덴만 일대에서 첫 해적퇴치 합동훈련 실시
- 9.18~20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미국을 방문하여 북
 한·북핵문제 협의(글린 데이비스 미 대부정책 특별대표 등 국무부
 당국자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 접견)
- 9.19 러시아, 미국의 주러 국제 개발처의 프로그램 중 인권과 선거감시와
 같은 일부 러시아의 주권을 침해하였다며 강제철수 집행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촉구 결의안 발표
- 9.22~26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 서울서 한국 외교통상부, 통일부 당국자들
 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협의
- 9.23 일본 극우단체 200여명 도쿄 도심에서 국교단절 등을 요구하며 극단
 적인 협한시위
- 9.24 유엔총회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지역협력문제 등 논의
- 9.27 북한, 평안남도 서해상에서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 9.28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 지식인 “한·중과 영토분쟁 일본 도발과 관련”
 일본의 자성을 촉구하는 호소문 발표
- 10.1 북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에 남았다가 숨진 일본인 유족의 묘 참
 배를 처음으로 허용
- 10.4 북한 농업성·중국 농업부, 평양에서 농업부문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
 를 체결
- 10.5 북·러, 재외파견 노동자의 노동 활동을 보장하기위한 실무그룹회의
 제3차회의 의정서가 평양에서 조인
- 10.7 한·미, ‘미사일지침’의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한 수정안 발표
- 10.17 한·미·일, 도쿄서 고관급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여 북한정
 세논의

- 해경, 불법조업어선 단속중 중국 선원 사망
- 10.18~20 글렌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해 북핵 공조방안을 논의
- 10.19 일본 사이키 아키라를 외무심의관과 러시아 모르그로후 외무차관 차관급 회의 개최,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의견교환
- 10.22~24 전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정계 인사, 중국 외교학회의 초청으로 방중
- 10.23 아리타 요시후 민주당 의원, 2차 대전 당시 북한에 남았다가 숨진 일본인 유족과 함께 매장지 시찰 위해 북한에 입국
- 10.25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장관, 리치창 중국 부수상과 회담
- 10.25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일본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 등과 회담
- 10.29 시리아의 문화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경제대표단 방북
한·중, 사회보협협정 정식 체결
- 10.30 대만 퇴역 해군 장교, 기밀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체포
- 10.31 양제츠 중국 외교부 부장, 류우의 통일부 장관과 회견
- 10.31 한·미, 군산서 공군연합훈련 실시
- 11.1 일본,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 쓰레기(위성 파편) 감시 강화 작업에 동참
- 11.1 한·미, 제44차 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
-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 안호영 외교통상부 차관 예방
-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 일본 외무성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면담
- 제2회 ‘중·미 안보관계 및 협력’ 세미나개최
- 11.16 한·러, 서울에서 제5차 대테러협의회 개최
- 11.7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국 공산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 축전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닌오위다오 ‘실효지배’ 인정한 적 없다고 발표
- 11.8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
- 11.15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시진핑 중국 총서기에 축전
- 11.15~16 북·일, 국장급 회담 남북자 문제 논의
- 11.16 이명박 대통령, 시진핑 중국 총서기에 축전을 보내 ‘평화·공동번영 희망’ 강조
- 11.18~20 캄보디아 프놈펜서 아세안+3 개최
- 11.19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 캄보디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견
-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얀마 방문
- 11.19~21 이도훈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6자회담 차석대표) 방미
- 11.20 클린턴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
- 러·일, 일본 기업의 시베리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
- 11.20~22 중국공산당 2최고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중국공산당 우호대표단’ 방한

- 11.22 북한, 남한의 연평도 공격위협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서울서 개최
- 11.26 한·중, 베이징서 제5차 고위급 전략대화 개최(장즈쑤 중국 외교부 상
부부부장-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
- 11.27 중국, 북한 로켓발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발표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 첫 합의 채택
- 11.29 일본 민주당, 총선 공약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라고 명시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
회동
- 12.2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을 클리퍼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와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채널’ 통해 미국에 통보
- 북한, 이달 10~22일 중 오전 7시부터 12시 사이 장거리 로켓 발사계
획을 주변국에 통보
- 12.3 정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연쇄 접촉을 갖고 북한 미사일 문제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
- 12.4 러시아 지방정부 투자 프로젝트 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서울서
개최
- 12.6 일본, 북한 로켓 대비 도쿄 등 7곳에 패트리엇 미사일과 이지스함
배치
- 12.9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시일연장 검토 발표
- 일본, 북한 로켓 긴급대책본부 설치와 동시에 대응태세 완료
- 12.11 호세 필리페 모라에스 카브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
장,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도발이자 위반 행위’라며 경고
- 12.12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
중국, 국영통신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발사 비난
-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항의
- 이규형 주중 대사,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
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
- 12.14 러시아,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유엔안보리 대
북 추가 결의논의 지지 표명
- 오바마 미국 대통령, 대러시아 인권 법안인 마그니츠키 법안에 최종
서명
- 12.16 일본 총선에서 강경보수 성향의 자민당 승리, 아베 내각 출범
- 12.18 중국, 헬기 수출 계약 지연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남아 있던 러시
아의 약 157만 스위스 프랑(약 18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협약 이행

- 12.19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한·러 관계의 발전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박근혜 당선자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 12.20 미국 하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 12.21 러시아 하원, 미국의 마그니츠키법 채택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미 인권법안을 통과
- 12.23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 항공기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상공 부근에 접근, 일본 전투기 발진하며 대치
- 12.26 아베 신조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 정권,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수업료 무상화를 거부
- 12.27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외무상과 전화 회담
- 12.28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
- 12.29 미국 하원,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에 서명

북한정세 일지

- 1.1 북한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여 김정은체제의 유일 영도와 충성을 강조
 김정은, 새해 첫 공식활동으로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시찰
- 1.5 북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강화를 주장
- 1.2~6 북한, ‘당 정치국 결정서와 당 중앙위·군사위 공동구호 및 올해 공동사설’ 관철을 위해 평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별 군중대회, 청년전위 등 단위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전선동 및 체제결속을 도모
- 1.6 최영림 북한총리, 동림광산기계공장, 동림전기공장 현지지도 및 평양 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찾아 경공업제품들의 생산보장을 위한 조직사업 진행
- 1.9 육·해·공군 장병들,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김정일위원장 유훈관철 및 김정은 부위원장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결의대회’ 진행
- 1.12 북한, 노동당 정치국을 통해 1.12 ‘특별보도’(4개항) 발표, △김정일

- 금수산공전에 안치 △광명성절 제정(2.16) △김정일 동상 건립 △김정일 태양상(초상화)과 영생탑 건립
- 1.16~18 북한, 청년동맹 결성일(46.1.17) 66돌을 계기로 당 정치국 결정서 및 공동구호·공동시설 관철을 결의하는 한편, 보도매체를 통해 ‘최고사령관의 선봉대·돌격대·예비전투부대’ 등으로 선동하고 △안주시 청년전위 쫓기모임(1.16) △청년동맹 중앙위 전원회의(1.18)등을 개최
- 1.18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남긴 유훈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잘 받들라는 것이었다”고 보도하며 충성 강조
- 1.22 북한, 최영림 총리 주재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경제계획 수행총화와 올해 공동시설 등에 제시된 과업 토의
- 2.1 북한,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제49차 전원회의를 평양에서 진행
- 2.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정일 위원장 생일 70돌 계기 ‘김정일일훈장’,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 제정 명령 발표
- 2.5 김정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 관련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온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
- 2.16 북한, 금수산기념공전을 금수산태양공전으로 명명 공동결정(2.15) 공표 및 육·해·공군 장병들의 김일성·김정일 대원수에 경의 표시와 김정은 최고사령관에게 충성맹세 예식행사(열병행진 등)를 금수산기념공전광장에서 진행
- 2.21 김정은, 북한의 미사일부대를 관할하는 인민군 제 842군부대 시찰
- 2.26 김정은,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킨 서남전선지구에 있는 인민군 제4군단 사령부 예하 군부대들을 시찰
- 3.2 김정은, 2일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를 시찰
- 3.9 김정은, 9일 북한군 해상육전대 병력이 주둔하는 서해 초도 방어대 시찰
- 3.15 김정은, 김정일 사망 당시 “유훈관철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뚜렷이 밝혀주었다”면서 유훈관철을 강조
- 3.16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4.12~16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3호’를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
- 3.25 김정일 사망 100일 애도기간 종료, △김정은 금수산공전 참배 △대규모 추모대회 개최
- 4.6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성국가 건설의 상징’으로 강조해온 자강도 희천발전소(수력발전소) 준공식
- 4.9 북한,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강성대국 청사진을 제시하고 핵을 강성대국의 핵심요소로 강조

- 4.11 북한, 평양(만수대의사당 추정)에서 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개최하고 △노동당 규약 개정 △조직문제 등에 대해 토의 결정
- 4.13 김정은, 김일성 생일 100돌을 맞아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9호를 하달, 중장 1명, 소장 70명의 장령급 인사
북한,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개최
- 4.15 김정은, 김일성탄생 100주년 열병식에서 핵능력 무기화 선언
- 4.19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광명성3호 발사 실패와 관련 “우리에 게는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이 있다”고 주장
- 4.23 북한, 최영림 내각총리 주재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1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 총화’ △‘2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2012년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
- 4.25 북한, 인민군 창건일 80돌을 맞아 김정은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를 개최, △군사중시 △주체혁명완성 △충성다짐 등을 강조
북한, 영웅거리에 ‘만수교고기상집’ 개업
- 5.3 북한, 김일성탄생 100돌에 즈음하여 함경남도의 단천향 준공식
- 5.8 북한, 김정은이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에게 한 담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4.27)가 8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고 발표
- 5.10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탈남자’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고 최근 남조선과 해외에서 탈남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
- 5.11 김정은, 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노동당의 새 지도사상으로 결정
- 5.22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22일 김정은 시대의 충성을 강요하는 ‘새 지도자상’으로 “김일성 애국주의”를 공식화
- 5.30 북한, 최근 개정헌법에 “핵보유국” 명기
- 6.3 북한의 소년단 창립 66돌을 경축하는 대규모 행사가 3일 평양에서 개막 △평양시내 여러 곳을 참관 △은하수음악회와 조선소년단 전국 연합단체대회, 학생소년들의 TV지적체자랑무대, 전국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에 참가
- 6.7 북한 조선중앙통신,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외국인에 황금평·위화도 특구 무비자 출입 허용 보도
- 6.12 북한, 6월에도 가뭄이 지속되어 황해북도 지방에서 극심한 가뭄피해가 있다고 보도하며 가뭄과의 투쟁 독려(황해북도 황주군, 서흥군, 연탄군, 수안군 및 송림시의 피해가 심각)
- 6.19 북한, 김정일 위원장 당 사업 개시 48돌(64.6.19) 기념 중앙보고대회

- 를 4·25문화회관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당·정·군 주요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6.25 북한, '선군의 기치 높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미제의 복침'을 거듭 주장하고 '선군' 강조
- 6.28 북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6·28 방침'을 북한 내부에 공포, 협동농장과 기업소에 더 큰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제공
- 6.30 북한 노동신문, '그이와 인민'이라는 장문의 '정론'을 싣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 사실이 사망 이틀 뒤에 공개된 배경을 조명하며 북한 주민을 배려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치라고 설명
- 7.4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노동신문에 게재한 '조선전체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글에서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수령님의 업적'이라고 발표
- 7.8 김정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등 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
- 7.12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 10년 만에 개최, △직업총동맹(7.17), 농업근로자동맹(7.18), 여성동맹(7.19)
- 7.17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명의의 보도문에서 현영철 인민군 대장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하고 리영호 후임에 임명
- 7.18 북한 조선중앙통신, '중대보도'를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발표
- 7.19 북한, 김정은 원수 칭호 축하 평양시경축대회를 19일 평양체육관에서 개최
- 7.27 북한,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삼천리강토 위에 하루빨리 통일조국을 일떠세우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 △'선군' 강조 △중앙보고대회 △'전승절' 결의모임
- 7.28~31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태풍과 폭우로 인해 '88명 사망과 134명 부상' 등 여러 지역 인적·물적 피해를 상세히 보도하며 피해복구를 독려, △살림집 파괴 및 침수 △농작물 피해 △공공건물과 도로·제방 등 파손
- 8.3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김정일애국주의" 강조
- 8.7 김정은, UFG 연습을 앞두고 제552군부대 산하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하고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 △인민군 장병들을 격려
- 8.8 북한, 창성연석회의 50돌 기념 중앙보고회 등을 개최, △지방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인민생활의 문제 해결 노력
- 8.14 북한, 중국과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 및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지도위 제3차 회의 개최(중국 베이징)
- 8.18 북한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을 주도했던 북한군 무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 '영웅방어대' 칭호를 수여
- 8.20 북한, 제2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자, 외신 기자들에 라선지구 선전하고 투자유치 독려
- 8.22 북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의 건설과정과 성과를 보도하며 완공을 독려
- 8.25 북한, 선군혁명 영도 52돌을 기념 8.25 경축연회를 개최, 김정은 연설
- 8.27~30 북한, 청년절을 계기로 각종 행사를 개최, △경축대회 △햇불행진
- 9.1 김정은, 장전거리에 개장한 '해맞이 식당' 현지지도
- 9.5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9.25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9.3)을 발표
- 9.7 북한, 중국에서 열린 제8회 지린·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의 '조선(북한)의 날 및 중·조무역투자프로젝트상담회' 행사 개최, △황금평의 개발계획과 투자기업을 위한 각종 우대정책을 소개 △투자 유치에 주력
- 9.8~10 북한, 권경 수립 64돌 '건국절' 맞아 각종 행사를 진행, △중앙보고대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일 애국주의 강조
- 9.15 북한, 황금평경제특구 관리청사 착공식 △북·중 두 나라의 번영 강조
- 9.2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개최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보선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 광범기로 교체
- 10.6~8 북한,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5돌(10.8)을 맞아 '중앙보고대회' 등 각종행사를 진행, △중앙보고대회 △기념행사 △국가안전보위부 시찰(김정은)
- 10.10 김정은, 노동당 창건 67주년 기념일인 10일 주요 군 간부를 대동하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
- 10.13 김정은, 10·12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설립 65돌을 맞아 학원 교직원·학생들에게 서한 송부
- 10.16 북한, '생눈길을 헤치는 정신으로 창조하며 승리해나가자'라는 제목의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새 시대정신'을 강조
- 10.22 북한, 최영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의 진행하여 경제사업 중점 논의
- 10.28~30 북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설립('52.10.28) 60돌 행사를 개최하고 △보고대회 △연회 △동상 제막식 △모란봉악단공연 등을 진행
- 10.31 북한, 인민군 중대 청년동맹 초급단체위원장 대회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하고 김정은에 대한 맹세문 채택
- 11.14 김정은, 시진핑 신임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축전

- 11.17 북한, 평양에서 지난 10월부터 중점적으로 진행된 공원 조성 사업 등의 성과를 소개하며 '새로운 평양변영기' 도래를 선전
- 11.21 북한, 직접자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4년간 발전전략 설정, △재난 대비 사전준비 및 긴급 대응능력 향상 △질병 예방, 구급처치 기술 보급 및 보건 선전·교육 강화 △적십자 운동의 근본원칙과 인도주의 정신 확산 △이산가족의 고통 경감 및 해외동포의 인권과 존엄, 권리 옹호 등
- 11.23~26 북한, 전국 분주소장회의를 개최, △분주소 강화 △경비보안대책 마련 △김정은과 기념사진촬영
- 11.26 북한, 전국 사법검찰일꾼열성자대회를 개최, △김정은 서한('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전달(최태복) △검찰, 재판부문화회
- 11.29 북한, 항공절(11.29)지정(5.3) 이후 첫 행사를 개최하고 △항공절 기념모임 △항공절 경축연회 △김정은에 대한 충성강조
- 11.30 김정은, 시진핑 중국 총서기의 친서를 가지고 방북한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
- 12.1 북한,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체 실용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를 운반로켓에 '은하3호'에 실어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 △평북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 △발사예정시기 12.10~22
- 12.5 북한, 전국 법무일꾼대회를 개최, △일시 및 장소: '12. 12. 5(수), 인민문화회관 △참가: 김영남·최태복·양형섭·리명수·전승훈 △진행순서: 보고(양형섭) → 토론 → '맹세문' 채택
- 12.7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추진된 각종 사업을 결산하며 '지난 1년'을 강조, △"새 시대를 개척한 역사의 기적" △"새로운 주체 100년 대진군의 첫해"
- 12.11 북한,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부자 동상 앞에서 노동계급과 조선직업총동맹(직맹) 구성원 맹세모임
- 12.14 북한, 김일성광장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 발사를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 개최
- 12.16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주석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일 사망 1주기 중앙추모대회 개최
- 12.21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의 2012년 한해 업적'을 열거하며 '영도력' 찬양, △광명성3호 발사, 금수산 태양궁전 명명, 희천발전소 준공 △수령영생위업실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 강성국가 건설 등, 한편 북한은 중통을 통해 미국인 배준호씨 억류 사실을 발표 △반공화국적 대범죄 감행하여 해당기관 억류 △본인의 범죄행위 인정 등 언급
- 12.24 김정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생일 70돌 즈음 '북·중 친선 강조' 축전 발송

-
- 12.25 북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참석해 김정은 당 제1비서의 ‘군최고사령관’ 추대(‘11.12.30) 1돌 기념 경축모임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
- 12.26 사회주의 헌법 발표(’72.12.27)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12.28 북한,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1돌 관련 행사 진행, △기록영화 ‘백두의 선군혁명 위업을 계승하시어’ 상영 △청년학생들과 여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주북 무관단,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참관 및 김일성부자동상 참배, 김정은 당 제1비서에게 보내는 축하편지와 꽃바구니를 김격식 대장에게 전달
- 12.29 북한,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1돌(12·30)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리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중심	통일구상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외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0,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2,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근,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	-------	---------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1)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기타

2010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e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연례정보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보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아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립금속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4(E)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5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Studies Series

비매출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기타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ark Young Ho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 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례정세보고서 2012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2~20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